

공공경제

2023 SUMMER Vol.14

기획특집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혁신도시 박람회 경남 혁신도시, 국민의 안전과 상생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끈다



『공공경제』와 함께하세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공공기관 정책과 사례, 이슈를 바탕으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공경제』가 기관과 정부, 국민 간의 공감과 혁신, 소통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정부와 공공기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5일 코로나19에 내린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해제를 발표하면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전염병 사태는 지난 3년간 정부와 시장 모두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심각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고, 이는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부채 급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각국 정부는 한시적 지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재정 상태를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점진적으로 진정되는 만큼,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도 시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정부예산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2019년 이후 최저치이다. 지난해 9월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2023~2026년간 GDP 대비 0.6% 범위 내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건전화 노력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출 규모와 정의 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액은 2022년 예산 기준 791조 9,138억원 규모로, 2021년 결산 대비 33조 356억원 증가해 전년 대비 4.4%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향후 이러한 증가율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은 대체적인 관계도 존재하지만, 정책 과정에서 정부를 대신해 주로 정책집행적 기능(보완적인 관계)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지출 증가율 감소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코로나19 대응(복지, 공중보건, 정책자금) 및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국가R&D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과 관련된 기관들의 예산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공공기관 예산은 물론 조직·인사 분야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합리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의 전체 총수입에서 정부순지원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1.49%에서 2022년 13.70%로 정부 자원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특히 기금의 위탁관리 및 정부 업무의 위탁집행업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준정부기관의 경우 지원 축소 등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 맥락에서 2023년 총 4조원 예산을 차지하는 수지차 보전기관의 정부 출연·보조사업 규모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 출자 공공기관의 배당 성향을 높이려는 정부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정부 출자 공공기관의 정부배당액은 총 8조 5,217억원이며, 이는 정부 세외수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3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의 25.7조원 규모 자구안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이러한 대상 기관의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등에 대한 노력은 배가될 가능성이 크다.○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CONTENTS

공공경제

2023 SUMMER Vol.14



표지 이야기

2022 진주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금상으로 선정된
김연희 님의 '축석루 전경'입니다.
(출처: 진주시청)

발행인	김재진 KIPF 원장
편집인	라영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편집위원	변민정 KIPF 정책사업팀장 장정순 KIPF 연구출판팀장
제작지원	유승현, 강석훈, 남지현, 소병욱, 이부연
외주지원	임영현
발행일	2023년 6월 30일
등록일	2020년 5월 13일(세종,바00032)
디자인/제작	고려씨엔피

정기구독 안내

신청방법	우편, 전화, 이메일을 이용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전 화	(044) 414-2431
이메일	soe@kipf.re.kr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구독료	권당 3,000원 (1년 정기구독 10,000원)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1005-103-961530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공공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 「공공경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특집



- 08 정책리포트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김택수 기획재정부 공공안전정책팀장
- 13 전문가VIEW I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하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의 자세
이준원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
- 16 전문가VIEW II
개인정보 수집은 이제 그만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분산ID 도입으로 해결
이기혁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교수
- 19 Round Table
국가 재난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이번 『공공경제』
Vol.14은 어떠셨나요?

『공공경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과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아쉬웠던 점 등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의견과 함께 성함,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셔서 담당자 이메일(soe@kipf.re.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주시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3만원)을 보내드립니다. 당첨된 독자분께는 보내주시신 연락처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공공기관 NOW



공공기관 TALK



28 공공정책 동향

정책동향 소식

34 Trend Focus

공공기관의 글로벌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 도입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

정준희 대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38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동향

주요국의 공기업 국가지주회사 현황

강석훈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43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사업

글로벌 해운물류시장의 변화와 부산항만공사 해외물류사업

구자림 부산항만공사 글로벌사업단장

50 혁신이야기 I_한국동서발전(주)

주민참여 사업인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규제샌드박스 개선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산

52 혁신이야기 II_도로교통공단

빅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개선!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 수준으로 견인

56 CEO인터뷰 I

건강한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의 탈빈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62 CEO인터뷰 II

생명의 소중함,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

68 혁신도시 박람회

경남 혁신도시, 국민의 안전과 상생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끈다
국토안전관리원

74 잡(JOB)담 I

한국서부발전(주)

김양욱 한국서부발전 인재육성부 주임

78 잡(JOB)담 II

한국에너지공단

홍혜주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지원실 대리

82 나의 취업성공기 I

30대도 공공기관 취업이 가능한가요? YES!

김서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 보험급여팀 주임

85 나의 취업성공기 II

NCS, 방향할 자유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

김효민 통일연구원 인사팀 행정원



기획특집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정부, 전문가, 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정책리포트’에서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이어 ‘전문가 VIEW’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기업, 근로자의 역할을 모색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본다. 마지막으로 ‘Round Table’에서는 국가 재난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논의한다.

정책리포트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전문가VIEW I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하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의 자세

전문가VIEW II

개인정보 수집은 이제 그만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분산ID 도입으로 해결

Round Table

국가 재난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S
T
O
P**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김택수
기획재정부
공공안전정책팀장

들어가며

2022년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39명에서 27명으로 30% 감소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정책, 공공기관 경영진 및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경각심이 긍정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그 중에서도 2020년 6월에 도입한 안전관리등급제와 그에 따른 맞춤형 후속조치들이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능력 제고와 안전책임경영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추진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내용, 성과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자.

공공기관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신설

2019년 3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내에 공공안전정책팀이 신설됐다. 공공기관 혁신, 운영,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 등의 정책을 다루는 곳인데, 왜 생겨났을까. 2018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한국서부발전 협력업체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언론에 넘쳐났고, 국민 공분은 상당했다. 재발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이 수립됐으며, 기획재정부도 2019년 3월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컨트롤타워가 바로 공공안전정책팀이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추진 배경>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안전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했다. 또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안전 관련 책무 및 이행 사항 등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안전책임경영 이행력 확보를 위해 안전경영책임 보고서를 작성·공시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실제 최일선 작업현장의 안전의식 변화, 나아가 기관 전체에 걸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개별 법률에 따른 안전 관련 평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위험 작업현장의 유형도 다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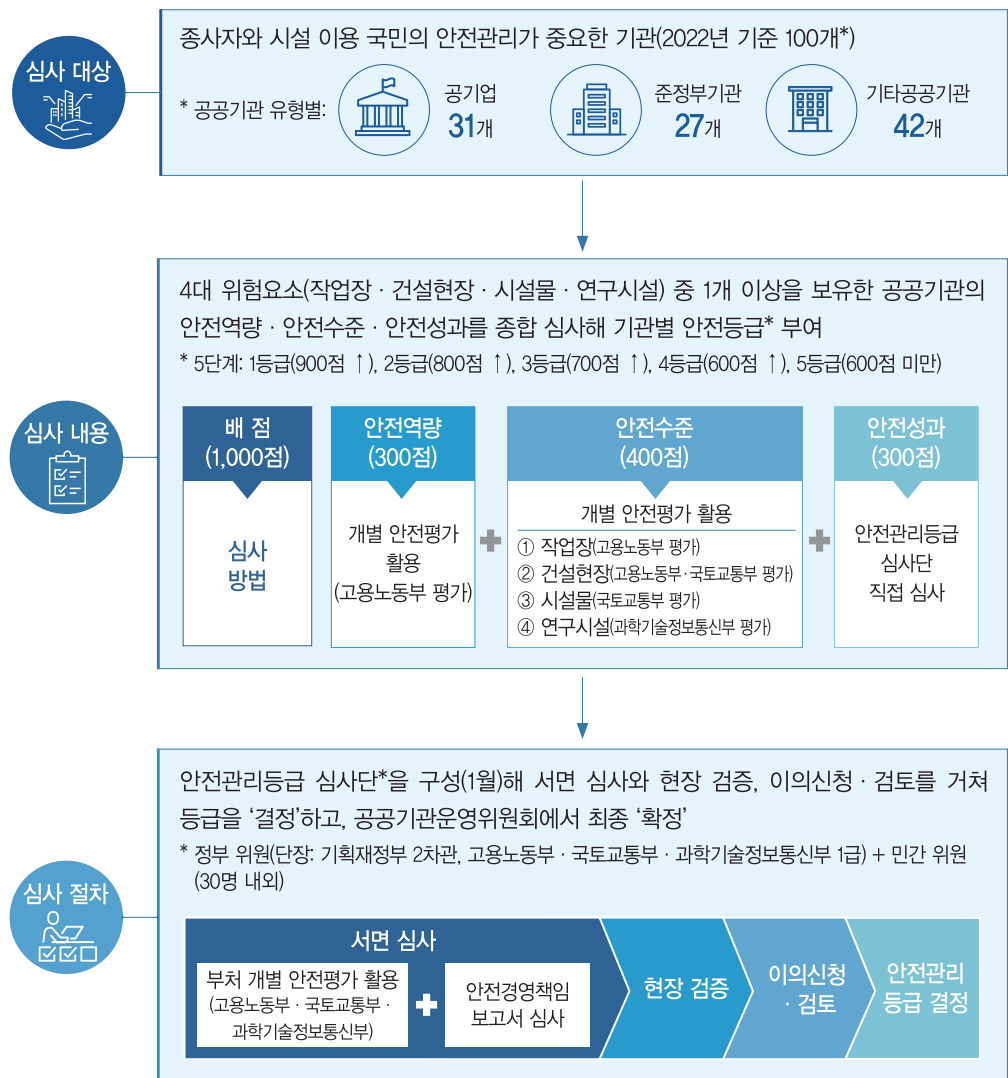
그간 정부가 추진해 왔던 안전 정책·제도 및 인프라를 재정비해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절실한 그때, 탄생한 제도가 바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이다.

〈도입 목적〉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장·작업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지닌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종합 진단하고, 취약 분야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도입했다.

2020년 6월에 시범 실시했고, 본격적인 실시는 올해가 세 번째이다.

그림 1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개요



〈도입 효과〉

매년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전에 비해 분명히 높아졌다. 또한 공공기관별 안전관리등급을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공공기관 간 선의의 경쟁도 유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입 첫해 대비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25개가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은 23개가 감소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아울러,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도 2020년 45명에서 2022년 27명으로 40%(18명) 감소하는 등 사고사망 감축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1
공공기관 종합 안전관리등급 현황
(단위: 개, %)

구분	대상 기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 미흡)
2020년도(a)	98	-	8(8.2)	57(58.2)	31(31.6)	2(2.0)
2021년도(b)	99	-	11(11.1)	59(59.6)	26(26.3)	3(3.0)
2022년도(c)	100	-	30(30.0)	60(60.0)	9(9.0)	1(1.0)
증감(c-a)	2	-	22(21.8)	3(1.2)	△22(△22.6)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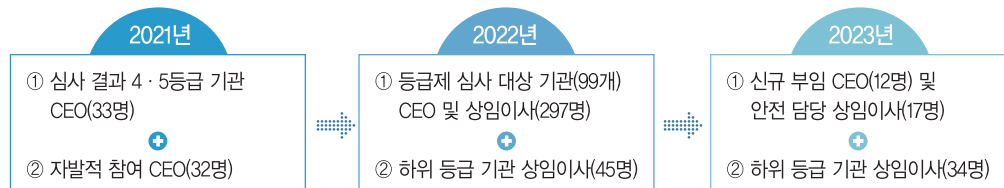
〈후속 조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일회성 심사 제도가 아니다.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이 도입 취지인 만큼, 심사 결과 하위 등급 기관의 취약 분야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후속조치를 촘촘히 추진하고 있다.

【경영진 안전혁신 교육】

CEO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경영 우선순위 설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1년 11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경영진 안전혁신 교육과정을 위탁·개설했고, 교육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안전의식이 19.6%(78.6점 → 94.0점) 대폭 향상되는 등 교육 효과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교육과정은 작업장, 건설현장, 연구시설 등 유사 유형의 작업현장을 가진 기관을 동일 과정으로 편성하고, 안전과 경영진 역할 등 이론과 우수사례 발표·토론 등 안전리더십 발휘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CEO는 3시간, 상임이사는 체험교육 1시간을 더해 총 4시간으로 운영 중이다. 2023년 하반기 하위 등급 기관 경영진 교육과정은 안전능력 조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를 구성해 실시할 계획이다.

그림 2
경영진 안전혁신 교육 실시 현황



【안전부서 직원 역량강화 교육】

안전부서 직원의 전문성 향상은 기본이다. 이론 중심의 교육이 아닌,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습·체험 위주의 교육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안전부서 직원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이 교육과정은 안전보건공단 울산·공주·제천·담양 체험교육장을 활용한다. 2022년은 건설현장 보유 등 위험도가 높은 기관의 안전부서 직원에게 이론 → 실습·체험 → 발표·토론 형식의 실전형 과정(20시간)을 운영했다. 교육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안전역량 향상도가 25.9%(67.1점 → 84.5점) 대폭 향상되는 등 교육 효과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2023년에는 작업장,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안전부서 직원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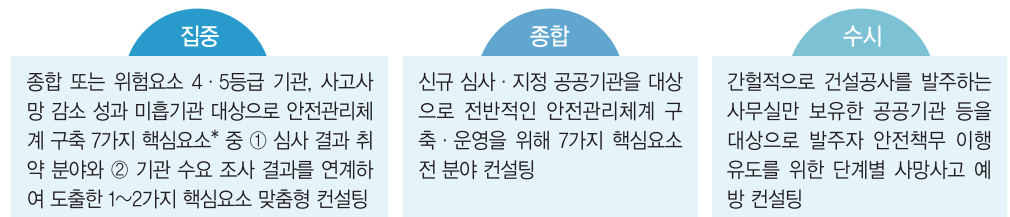
그림 3
안전부서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현황



【공공기관 맞춤형 컨설팅】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 첫걸음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의 이행이다. 기획재정부는 등급제 도입 첫해부터 관계기관과 협업해 컨설팅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며 하위 등급 기관 대상으로 개선 필요사항의 이행 지원뿐만 아니라, 전사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집중 컨설팅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신규 심사·지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 컨설팅과 간헐적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수시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실태 파악, 문제점 발견, 개선대책 제시 등 체계 전반에 관한 조언 및 해결책을 제시해 보다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4
컨설팅 유형



* (7가지 핵심요소) ① 경영자 리더십, ② 근로자의 참여, ③ 위험요인 파악, ④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⑦ 평가 및 개선

〈심사 결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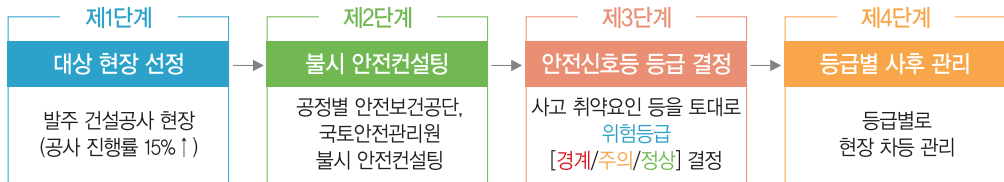
2022년부터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급 심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경영진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상황판(안전신호등) 사업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공기관 사고사망자를 분석해 보니, 일부 공공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건설공사 발주현장 사고사망자가 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87%를 차지해 사고사망 다수 발생 기관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기관 경영진의 강력한 안전경영 추진 의지와 적극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 설계가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안전신호등 사업이 추진됐다. 안전신호등 사업은 현장별 위험 수준을 기관 내부망에 3색(●●●)으로 표출해 경영진이 이를 인지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자율적 안전 활동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둔 안전신호등 사업은 2022년에 건설현장을 다수 보유한 한국도로공사(8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운영했다.

그림 5

안전신호등 추진 절차



그 결과,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66.7%가 감소(2021년 9명 → 2022년 3명, 산재 승인 기준)했다. 2023년에는 유사 건설현장을 보유한 국가철도공단으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결론을 대신하여

2019년 2월 기획재정부 공공안전정책팀이 신설되고, 지난 4년 동안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이전보다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는 하나, 지금까지는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의 경영평가 반영, 안전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동해 자율성과 지속성이 다소 부족한 상태이다.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아무리 작은 안전문제라도 소홀히 했을 경우,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안전책임경영 및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국민 안전 확보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실질적인 안전도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전신호등 사업과 같이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하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의 자세



이준원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을 2021년 1월 26일 제정해, 지난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 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해 나가기 위한 법률이다. 동시에 위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나 안전보건 관리상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에게도 50억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강행 법률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 874명이 추락, 협착 등의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그 중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67명(19.1%)이 사망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07명(80.9%)이 사망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시행할 예정이어서, 사고사망재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 중소 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와 판결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4월까지 14개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사유로 제시된 주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미비(11건),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점검 절차 미비(7건),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 미수립과 점검 미 실시(6건) 등이다.

이 중 2개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법원 판결을 받았다. 1호 판결은 건

설업 중견기업인 온유파트너스에 대한 판결이었다. 2022년 5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요양 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근로자가 안전난간 없이 철근을 옮기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원청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호 판결은 제조업 대기업인 한국제강에서 2022년 3월 협력업체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 무게의 철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에 대해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법정구속)을 선고했다. 두 판결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안전보건 법령 준수 등 관리상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한국제강 대표는 1심 판결 후 항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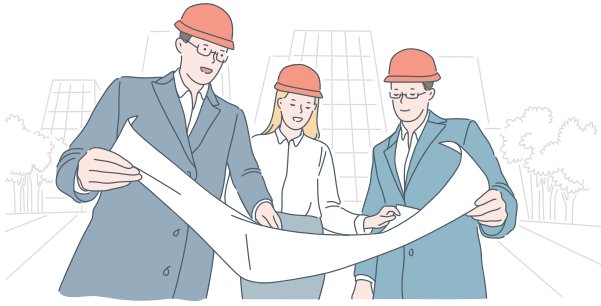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며, 안전보건 법령 준수 등 관리상 조치를 하도록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안전보건 전문 인력과 예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지만 중소 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도 없고,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비나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16조에서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주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등 정부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술 지원, 안전설비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사업주 등의 역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및 시행, △안전보건 목표 설정,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등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점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관리 감독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의 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마련, 점검 실시,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의 작성 및 조치 교육훈련, △도급·위탁·용역 등 협력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기준의 마련 및 시행을 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와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및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도하는 법 제정 목적인 사망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자의 역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 취지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사망 등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이행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는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 이행도 중요하지만, 안전작업 절차를 이행하고,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따르는 근로자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본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보건 실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맺음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해 제정하고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정부는 안타까운 사고로 생명과 건강을 잃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경제적 여력이 없는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재정·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통한 사망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법령 준수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근로자 또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나 확보 노력에 적극 동참해 안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와 사업주, 근로자 모두 각자 맡은바 안전보건 책무를 다한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소중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사망 등 중대재해가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개인정보 수집은 이제 그만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분산ID 도입으로 해결



이기혁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교수
(사)한국디지털인증협회
회장

디지털 사회로 진화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생활이 보편화했다. 우리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아이디(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ID와 패스워드를 다시 찾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개인정보 제공은 일상화된 지 오래다.

대다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이 어디에 어떤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은 단골 메뉴가 된 지도 오래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양한 법제가 마련돼 있지만, 해킹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굴레가 반복된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ID(Decentralized Identity: DID)이다.

분산ID란

분산ID는 전자화된 신분증이다. 데이터만으로 이뤄진 것으로 컴퓨터나 스마트기기 등에 저장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물리적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된다.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듯이 인터넷 세상에서도 유일하게 사용된다. 분산원장(복제, 공유 또는 동기화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합의 기술, 데이터가 여러 사이트, 여러 기관 또는 국가에 분산돼 탈중앙화돼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을 이용해 중앙등록기관 없이 시장 자율로 운영되는 확장성 있는 자기주권 신원증명 체계를 말한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일상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이뤄졌고, 간편한 인증 수단 수요가 증가했다. 그 가운데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본인에게 부여해 ‘자기주권 신원(Self-Sovereign Identity: SSI)’을 실현할 수 있는 분산ID, 즉 ‘탈중앙화 신원증명’이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신원 도용과 사기의 위험성이 급증하면서 탈중앙화된 신원 확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분산ID와 개인정보 보호

분산ID는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원 확인 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개인을 증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분산ID는 개인의 스마트폰에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Verifiable Credential(VC, 자격증명)을 저장한 뒤 신원 확인이나 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특정 기관·기업 중앙 서버에 일괄적으로 저장·관리하던 기존의 중앙집중형 신원인증 체계에서 벗어났다는 점 때문에 ‘탈중앙화 신원 확인’으로도 불린다. 또한, 블록체인의 기술에 기반하기 때문에 데이터 위·변조의 위험이 적고, 개인 데이터를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영역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해 해킹 등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기존 신원인증 방식과 차이

가장 큰 차이는 개인의 정보를 기관이나 기업이 아닌 개인이 소유한다는 데 있다. 현재 인터넷 환경에서 신원정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증해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금융거래 등을 할 때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내가 동의한 거래가 맞음을 확인하기 위한 전자서명 수단이 기존의 공동(공인)인증서이다.

공동인증서는 자체 보안성은 뛰어나지만, 파일 형태로 존재해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감염, 해킹 등에 쉽게 노출되고는 했다. 공동인증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액티브X 등 여러 실행 프로그램이 필요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불편함의 대명사’로 불리던 공동인증서가 사라지면서 본인 인증수단이 다양해졌고, 분산ID가 차세대 신원인증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분산ID는 개인 신원정보를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개인 기기에서 관리하며,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거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분산ID는 중앙 서버에 개인정보를 모아두지 않고, 블록 단위로 쪼갠 뒤 서로 연결하는 기술이다. 분산ID는 블록체인에 암호화해 여러 서버에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 데이터 위조나 변조 등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분산ID 사례: 모바일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을 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 그러나 분산ID가 적용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신원을 증명한다. 정부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렸다. 라온시큐어 컨소시엄이 진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내 최초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보

안성과 편의성을 충족하는 분산ID 기술이 적용돼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돼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편리하게 꺼내 쓸 수 있고, 사용 이력도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탈중앙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자기주권을 강화하면서 데이터 위·변조를 원천 방지해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선거, 시험, 공항 탑승 수속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분산ID는 △투명성, △불변성, △상호호환성을 기반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신원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양한 분산ID 서비스의 상용화 및 대중화는 디지털 사회 전반의 신뢰성을 향상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림 1

모바일 자동차 운전면허증(왼쪽)과 기존 면허증(오른쪽) 비교



출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

개인정보 수집과 노출은 그만 할 때

분산ID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 시, △은행에서 금융 업무에 신분증이 필요할 때, △편의점, 무인자판기 등에서 성인 확인 필요시, △정부24(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원 확인, △앱으로 렌터카와 키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 등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가 각각 다르지만, 이용자는 동일한 한 명일 수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매번 나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 심지어는 신분증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건네주기도 한다. 이제 개인정보 수집과 노출은 그만 할 때가 왔다.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반으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도 분산ID로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사회 전체가 개인정보의 수집을 그만 두는 일에 동참하고, 분산ID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주는 각종 제도와 함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사회 구성원의 기존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도 필요하다.○

국가 재난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최근호 사회가 점차 급변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각종 재난이나 위험 또한 점차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져 사회 안전 부문에서의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재난관리의 개념과 특성, 범위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방기성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정의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또한, 화재, 붕괴,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가축전염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재난은 ‘사회재난’으로 정의합니다. UN 등 국제사회에서 재난이란 피해지역의 수습 역량을 초과해 정상적인 생존 조건의 붕괴가 유발되는 현상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나라는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관심을 쏟는 반면, 국제사회는 재난의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변성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



일자

2023년 5월 23일(화)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Webex)

사회

최근호

토론자

방기성, 변성수, 오윤경, 박시현

정리

강석훈, 이부연

Round Table 원고 내용은 참석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및 각 참석자 소속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보아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해외재난’으로 정의합니다. 「헌법」 전문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부분은 법에서 안전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는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의 보호, 일상생활의 안전 확보, 재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이 수행하는 체계적인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윤경 재난관리의 개념, 특성, 범위를 정의하기부터가 쉽지 않은 질문이고, 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정책 방향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적으로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 대비부터 대응,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나, 대부분 국가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법 체계가 비상관리(emergency management)의 관점에서 사건의 발생에 대한 대응, 구조·구급, 사건 직후의 복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난관리 전 과정 및 보칙을 통한 각종 안전정책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재난관리를 국가의 역할로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등 외국은 대응 개념으로 재난관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박시현 정부는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은 집행계획, 공공기관 등에서는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관리 업무에 협조해야 합니다. 자연재난 13종, 사회재난 28종에 대한 표준매뉴얼 41개 등 총 1만 300여 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재난 5종, 주요 상황 4종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개념을 구분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호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공포한 이후 국가 재난관리의 기본 틀을 구축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체계 및 현황과 일반 특징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방기성 저는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참사가 생길 때마다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팽창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호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2팀장



방기성
경운대
안전방재공학과 교수



변성수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시현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관리실장

한국의 재난관리는 내무부가 시작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자연재해 대비를 중심으로 재난관리를 했으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를 겪으면서 재난이 인위적이며 복합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전국 지자체에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었으며,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구분해 관리하게 됐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2004년에 차관급 부처인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한편,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의 내용을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장관급 부처인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장 대응 조직을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바뀌면서 국민안전처가 폐지되고 행정안전부로 통합되며 재난안전관리 기능이 축소됐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지만, 아직 재난안전관리체계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변성수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예방’과 ‘대비’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의 과정으로, ‘예방’은 재난의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활동이 이루어지며, ‘대비’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능력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재난 발생 후의 과정인 ‘대응’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관리 조직들의 직접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복구’는 재난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장기적·지속적인 활동입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지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 됩니다. 또한 범정부 대처가 필요할 때는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윤경 앞선 질문과 연계하여, 우리나라는 기본법상에서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난관리체계가 당초 자연재해, 특히 풍수해 중심으로, 그리고 시설관리 중심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이 현재까지 강하게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995년 사회재난관리체계 도입, 2003년 통합 재난관리체계 운영, 2015년 이후 다양한 안전관리 총괄·조정을 위한 제도 확대 등의 변화를 경험해 왔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재난안전관리 기능 및 인식이 크게 확장돼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며, 예산의 경우도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국가 중심의 예산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최근호 재난에 대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직기구와 단계별 활동 매뉴얼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재(人災)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재난관리 및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박시현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까지 정체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다행히 줄고 있지만,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주로 사회 재난이나 안전사고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중에서는 산업재해의 피해가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산재사고의 대부분(약 60%)이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데,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 현장은 2022년도 기준 약 16만개에 이르며, 이 중에서 정부의 현장점검 및 안전컨설팅은 1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및 시행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재난관리에 특화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조직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험을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 매뉴얼을 더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대처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배양하고 위기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기성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조직 및 전문 인력 관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재난 전담조직이 없고, 전담조직이 있더라도 기피 부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앙 공기업 중 일부만 재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의 1차 대응 기관인 지자체는 대부분 재난관리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방 공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대응 매뉴얼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절차나 지침이 미비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고 수습 본부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연동시켜 전 중앙부처가 대응의 조정과 지원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난 대응 및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대응 단계는 기능별 재난 대응 활동계획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이러한 계획은 중앙부처 간 수평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별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변성수 도시화, 첨단화, 복잡화, 고밀도화 등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모든 재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재난관리 시스템을 내재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재난관리 전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대응자로, 현장에서 직접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즉, 재난은 지역에서 발생하며, 지방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권한과 역할이 미약하며, 중앙정부의 관리와 통제에 따른 지침을 단순히 수행하는 소극적 재난관리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정부 조직 간 명확한 구조, 역할과 책임, 관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적 영역에서는 충분한 인력, 적절한 업무 배분 등과 필요시 신속하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 강화 등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의 확보와 함께 효과적 대응 관리체계 및 기술 정보체계, 그리고 재난관리 조직, 지역사회, 언론기관 간의 의사소통 네트워크 등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최근호 재난관리 부문의 모범사례를 DB화하고 노하우를 공유해 궁극적으로 시스템의 효과성 향상을 도모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재난관리 사례의 우리나라 적용은 재난관리의 선진화 및 고도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해외의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시스템과 안전관리 및 대응 제도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방기성 금융, 의료, 식품, 안전공학 등에서 일반화되는 리스크 개념을 재난관리의 기본 개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OECD 국가 대부분의 재난관리 부처에서 국가 리스크 평가 지침을 제정하고, 재난관리 전반에 활용합니다(예: 미국 주정부 위협·위험 식별 및 리스크 평가 THIRA(Threat and Hazard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캐나다 AHRAMG(All Hazards Risk Assessment Methodology Guidelines)).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국가 차원의 리스크 평가 지침을 제정·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단절되거나, 핵심적인 행정서비스가 단절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연속성 개념을 재난관리 업무에 내재화해야 합니다. 미국 등의 경우 재난관리계획 수립 시 정부의 연속성과 기능의 연속성은 필수적으로 포함되며, 재난 대응과 관련된 업무는 핵심적으로 수행됩니다.

변성수 국제사회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1994년 요코하마 전략, 2005년 효고 행동강령, 2015년 센다이 재난위험저감강령 등에 따라 재난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전략에 따라 1990년대는 재난의 예방과 완화가 주요 패러다임이었으며, 효고 행동강령이 발표된 2000년대에는 취약성 관리가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센다이 재난위험저감강령이 발표된 2015년 이후에는 회복탄력성이 재난관리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대두됐습니다. 회복탄력성은 재난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난 발생에 따른 사회체제의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충분히 준비하게 하며, 재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복탄력성은 단기 차원에서는 공동체 수준의 재난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를 개선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장기 차원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의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

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LACCCR(Los Angeles County 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프로젝트는 지역의 재난 관련 회복탄력성 형성을 목적으로 LA 카운티의 공중보건부, 지역 NGO 및 학계, 민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해 재난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후까지 일련의 재난관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윤경 우리나라 재난관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고려할 때 유의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처럼 재난의 예방 단계를 총괄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국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전 재해적 접근과 통합적 재난관리 개념의 경우, 예방은 분야별로(소관 부처별로) 각각 안전관리 규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역이고, 통합적 재난관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대응, 복구 등 사후적 관리는 기능별 접근(재난 유형에 관계없이 유사 기능이 필요)으로 해석되는 개념입니다. 법적 체계를 재난 유형별(소관 부처별)로 구축해 온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정책 운영체계를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응에 있어서도 미국이 제시하는 원칙은 주정부, 지방정부가 대응의 '최우선 주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 작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공무원 인력관리체계가 달라 해외의 법적 체계를 도입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정부 운영원리와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법제도 외에 최근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을 두는 정책은 조기경보체계입니다. 2022년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향후 5년 내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조기경보의 보호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호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며 피해 상황을 신속히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미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지 토론자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방기성 재난안전과 관련해 지자체장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재난안전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력을 확보해 해당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 전담 부서의 업무기능과 담당 공무원의 직렬 간 불균형(미스매칭) 현상을 줄이고, 재난관리 부서에 유능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2023년 1월에 정부가 범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재난안전관리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단계적 확충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 인력 재배치가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 부서 내에서 직렬 간 미스매칭이 발생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재난안전 부서의 빈자리는 재난안전 전문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면 충정원을 유지하면서 재난안전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성

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변성수 미래의 재난환경은 기상이변과 초고층 복합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물의 증가, 산업화·도시화의 가속 등으로 인해 극심재난의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구조의 복잡성과 연계성으로 인해 재난이나 안전사고의 2차 피해 발생과 단일재난의 복합재난 확대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재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안전취약계층은 재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은 안전취약계층 보호·지원 방안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9월 행정안전부가 GS리테일과 재해구호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 현장에 식품류, 생필품 등 구호물품 지원, 배송 차량을 활용한 안전 모니터링, GS25 편의점에서 대피소 안내 및 재난안전 정책 홍보 등의 협력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나 지역 시민단체 및 주민 등이 재난약자 구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과 민간단체, 주민들이 사회적 공헌 활동, 재능기부,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민간조직의 지속적인 재난약자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 파트너십과 스폰서십 형성이 필요합니다.

오윤경 공공기관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역할을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그 역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역할, 고유 업무 자체가 재난안전관리 영역을 포함하는 기관의 역할,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구분해 각자 역할에 맞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경우, 재난 대응 시 직접적인 관리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관 부처 및 담당 공무원에 준하는 기능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정부에 비해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공공기관이 산·학·연·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역할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기반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시현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재난안전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2가지 역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해 재난안전과 관련한 공공기관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시설과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재난안전과 관련된 4차 산업의 시험대(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재난과 안전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 NOW

〈공공기관 NOW〉는 최근 이슈가 되는 국내외 동향 및 기관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과 변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공정책 동향’에서는 공공기관 정책 관련 보도자료와 현안을 다루며, ‘Trend Focus’에서는 공공기관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소개하고, 산업별·기관 유형별 특성에 맞는 ESG 활동을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본다. ‘글로벌리포트’에서는 OECD 주요국의 공기업 국가지주회사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해외 항만공사의 해외물류사업 추진 사례를 통해 미래 항만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산항만공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혁신이야기’에서는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고민과 노력, 성과를 우수사례로 다뤘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동서발전의 주민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 도로교통공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통안전 개선사례를 소개한다.

공공정책 동향

정책동향 소식

Trend Focus

공공기관의 글로벌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 도입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동향

주요국의 공기업 국가지주회사 현황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사업

글로벌 해운물류시장의 변화와 부산항만공사 해외물류사업

혁신이야기

한국동서발전(주) / 도로교통공단





정책동향 소식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개에서 55개로 확대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6일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 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2월부터 교수·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로 직무급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1년 35개에서 2022년 55개 기관으로 확대돼 130개 기관 중 약 42%가 직무급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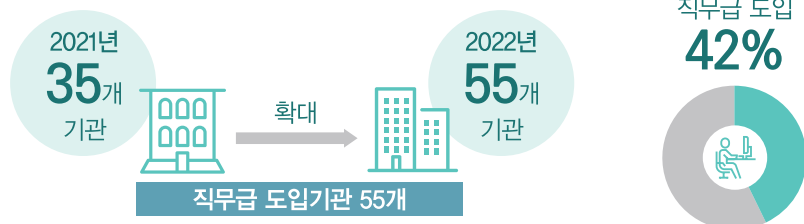
이번 점검에서 기관 대부분이 직무분석 등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들이 직무급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무급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기관들의 경우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직무의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해 이를 보수 구조에 잘 연계하고, 노사 협력을 통해 규정화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부 도입기관의 경우에는 보수 중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 및 직무 난이도 차이에 따른 보수의 차등수준이 미흡해 직무급 고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현장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작년 대비 우수기관 증가, 미흡기관 감소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25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를 전화와 현장 방문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우수기관이 지난해 대비 10개 늘어난 51개, 보통이 17개 증가한 113개, 미흡이 23개 감소한 81개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다만, 올해 조사에 신규로 포함된 7개 기관은 등급 평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공공기관들의 고객서비스 향상 노력과 코로나19 정상화로 인한 대면 서비스 회복이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등 4개 기관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81개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처가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고,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고객중심경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서비스 이용 후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 외에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지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 및 기대보다 우수한 서비스 제공 여부 같은 서비스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와 연계해 공공기관이 자율적·혁신적으로 고객중심경영을 지속 추진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34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총 347개 공공기관의 2022년도, 2023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습니다. 이번 정기공시(1분기)는 정원, 신규 채용, 재무정보, 복리후생비 등 30개 공시항목의 최근 5년간 경영정보를 공시했습니다.

공공기관 1분기 공시 결과, 2022년 총정원은 44.5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6,600명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수립한 기관별 혁신계획(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정원 조정(△12,442명)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 중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분기 총정원은 43.6만명으로 전년 말 대비 약 9천명 감소했습니다.

2022년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총 2.5만명 수준으로, 사회형평적 채용 지표('분야별 신



규 채용 ÷ 전체 신규 채용' 수치를 보면 청년(+2.5%p), 여성(+3.6%p), 장애인(+0.2%p), 이전 지역 인재(+0.2%p), 비수도권 인재(+3.0%p) 등 모든 분야에서 전년에 비해 개선됐습니다.

전체 공공기관 자산은 1,055조원이며 부채 670조원, 당기순손실 13.6조원, 부채비율 174.3%(전년 대비 +22.5%p)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할 경우 부채비율은 2021년 130.0%에서 2022년 128.0%로 전년 대비 낮아졌으며, 당기순이익은 9.3조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한전·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24조원) 및 자본 확충(10조원)을 강도 높게 추진 중입니다.

복리후생비 총액은 정원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지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6% 증가한 8,675억원이며,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복리후생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개선해야 할 과제 636건 중 2023년 1분기까지 절반 이상(327건, 51.4%)을 정비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공시된 '2022년도 및 2023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계획,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① 정원 조정 등 조직·인력 효율화, ② 비핵심·유휴 자산 매각 등 재무상태 개선, ③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공시 정확도 제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경영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2007년부터 주요 경영정보를 알리오에 공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점검 결과, 3년(기타공공기관은 2년) 연속 공시위반 벌점을 부과 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2개,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41개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어 '기관주의'를 받은 기관은 1개였고, 연간 벌점이 40점을 넘는 '불성실공시기관'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공기관들의 공시요류가 크게 줄어들어 공시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시요류는 단순오기·계산착오 등이 많았고,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2021년도 총 1,197건에서 2022년도 총 1,116건으로 줄었으며, 기관별 평균벌점도 2021년도 3.9점에서 2022년도 3.2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했고,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주



무부처에 점검 결과를 통보해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우수공시기관'(12개)에 다음 연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관주의' 기관(1개)에 대해서는 공시오류 개선계획서 제출 및 공시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① 점검 결과 빈번했던 공시오류 사례를 분석해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②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강화와 멘토링·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③ 올해에는 ESG 및 국정과제 공시항목 등을 확대하고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혁신계획 차질 없이 진행 - 2023년 1분기 점검 결과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년 7월)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예산효율화¹⁾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²⁾(2022년 10월), 자산효율화 계획³⁾(2022년 11월),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⁴⁾(2022년 12월)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분기마다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으로, 주무부처별로 기관별 이행실적을 취합 및 사전점검한 후 그 자료를 기획재정부 점검을 거쳐 발표할 계획입니다. 2023년 1분기 분야별 주요 점검⁵⁾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2023년 1분기)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자산 효율화	복리후생 개선	예산 효율화
계획 > △11,072명 ↓ 실적 > △10,721명 96.8% 이행	계획 > 6.8조원 ↓ 실적 > 1.4조원 매각·정비, 20.6% 이행	계획 > 636건 ↓ 실적 > 327건 개선, 51.4% 이행	2022년 경상경비 약 1.5조원 절감 (295개 기관 목표 달성)

- 1) 2022~2023년 경상경비 1.1조원 절감 및 삭감
- 2)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
- 3)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등 총 14.5조원 매각·정비
- 4) 공공기관 정원 12,442명 감축(공공기관 정원의 △2.8%)
- 5) 혁신계획 제출기관 350개 중 2023년 지정해제된 KAIST 등을 제외한 346개 기관 대상

기획재정부는 2023년 2분기 점검 결과가 나오는 7월에 반기별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혁신과제의 추가 발굴 및 보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추진 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2022년 산재 사망 30% 감소

2022년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39명에서 27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도입한 안전관리등급제가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능력 제고와 안전책임경영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사 결과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이 개선 필요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문과 경영진 및 안전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심사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에 시범운영한 건설현장 안전신호등 사업을 통해 사고사망자가 2021년 9명에서 2022년 3명으로 크게 감소(66.7%)해 올해는 이 사업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확대·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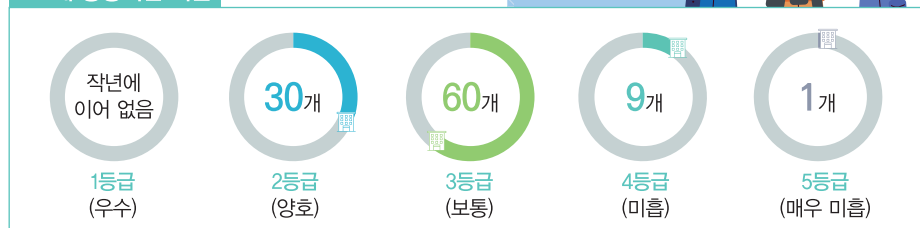
한편, 기획재정부는 4월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확정)했습니다.

100개 공공기관을 심사한 결과를 보면, 1등급(우수)은 전년에 이어 없었지만, 2등급(양호) 30개, 3등급(보통) 60개, 4등급(미흡) 9개, 5등급(매우 미흡) 1개 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20개가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은 19개가 감소해, 안전관리 수준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향상됐습니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모든 기관은 심사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을 올해 연말까지 이행해야 하며, 종합 안전관리등급 또는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이 4·5등급인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진단 및 자문을 실시하고, 경영진과 안전부서 직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국민 안전 확보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실질적인 안전도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전신호등 사업 같이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100개 공공기관 기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나갑니다

소리 없이 스며들고 있는 마약으로부터
소중한 사람, 행복한 일상을 지킵니다.

강력한 마약 단속,
재활과 치료, 예방교육을 통한
마약청정국으로의 힘찬 도약!
법무부가 함께 합니다.

NO!
DRUGS



법무부
홍보대사
양학선

공공기관의 글로벌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 도입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



정준희
대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이 2005년 ESG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ESG를 언급하지 않고는 경영활동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ESG는 기업 경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다. 특히, 올해는 주요한 글로벌 지속가능성(ESG)¹⁾ 공시기준이 확정 및 채택되는 시기이다. 현재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은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이고, 두 번째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정보의 베이스라인을 제정하고 있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 S2)이며, 마지막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변화 관련 공시기준이다. 이 세 가지 기준은 모두 올해 내로 확정할 예정이고, 많은 국가에서 채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IFRS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미국 SEC 기후변화 관련 공시기준은 투자자 중심의 공시기준으로, 투자자에게 기후변화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single materiality)에 대한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다. 반면, EU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ESRS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impact materiality)과 지구의 환경변화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single materiality)을 모두 공시하는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EU의 ESRS는 기후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물, 토지, 생물다양성과 같은 환경적 요소(E)와 함께 인권, 노동환경,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요소(S) 및 지배구조(G)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해 IFRS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을 준비 중이다. IFRS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투자자 중심의 공시기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보다 상장기업에 먼저 의무 적용될 가능성



1) 다수의 미디어나 연구에서 ESG와 지속가능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디어에서는 보다 익숙한 ESG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글로벌 기준, 규범, 법에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중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한 활동 및 정보를 포괄하는 단어로,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세 가지 주제 외에도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모든 활동 및 정보를 의미하기에, 보다 유연한 용어로 볼 수 있다. 본고는 일반적인 'ESG' 용어를 사용하지만, 기준이나 법률에 관해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높다. 그러나 IFRS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글로벌 베이스라인(global baseline)을 지향하기에 IFRS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공공기관 역시 최소한 지켜야 할 의무사항(minimum requirement)으로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필요성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 시스템,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을 통해 ESG 활동을 보고하기에 일부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공기관도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ESG 정보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사회적 가치는 재무적 가치(당기순이익, 매출액 등)와 달리 성과를 하나의 단위로 통일할 수 없다. 따라서 ESG 활동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다른 기업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항목만을 보고하거나, 기준과 단위를 임의로 조정해 ESG 성과가 높게 보이는 ESG 워싱(그린워싱)을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보고해야 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고의 누락과 같은 경영자의 지속가능성 워싱을 방지해 준다. 나아가 연도별로 동일 항목을 동일 기준을 적용해 비교하게 함으로써 기관의 ESG 성과 변화를 손쉽게 비교하도록 도와준다.

둘째,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ESG 정보의 신뢰성(reliability)을 높여 줄 것이다. 현재 ESG 공시는 자발적 공시이기 때문에 정보를 왜곡 또는 누락하여도 처벌 근거가 없다. 그러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공시 및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거나 할

예정이기에 정보의 신뢰성에 따라 일정 부분 처벌의 강도가 정해질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도입은 공공기관 ESG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ESG 정보의 가치관련성(relevance)을 높일 것이다. 현재 많은 공공기관은 홈페이지나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을 통해 ESG 정보를 공시하지만, 보고 시점, 보고 빈도, 보고 기업 등이 통일되지 않아 이해관계자가 관련 자료를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일부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기관의 홍보성 글이 대부분인 경우도 있어, 의도치 않게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ESG 정보의 적시성과 더불어 앞서 언급한 비교가능성 및 신뢰성 등을 높여 정보의 가치관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FRS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글로벌 베이스라인으로 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에 IFRS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공공기관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ESG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기에 IFRS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넘어 이중중요성(double materiality)을 보고하는 EU의 ERSR 이상의 수준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공급망과 스코프 3(Scope 3)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ERSR는 공급망 내 인권·사회·노동권, 환경, 거버넌스에 미치는 잠재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예방·해결 관련 자료를 요구한다. 즉, 공급망 내 협력사 및 관계사의 ESG 활동을 직접적으

로 관리하라는 의미이다. 스코프 3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가치사슬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관 때문에 배출한 협력사나 관계사의 온실가스양이다. 공급망과 스코프 3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으면, 기관은 협력사 및 관계사에 ESG 관련 부정적인 활동을 전가할 수 있다. 원가 절감이나 위험 회피의 목적으로 하청 또는 협력사를 활용하는 공공기관들은 지금부터라도 협력사 및 관계사 관리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관 특성에 맞는 ESG 활동을 찾아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과거 ESG 기준이 도입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ESG 정보가 기업 및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IT산업의 경우 폐수관리, 온실가스 배출관리, 토양관리 등과 같은 환경적 활동보다 보안, 사이버 테러 예방과 같은 활동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 ESG 공시기

준 및 평가지표는 산업별 차이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해 이를 경영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외부 ESG 평가를 위해 관련 지표를 모두 관리해 왔다. 현재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프레임워크 등을 활용해 기관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 역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요성(materiality)에 입각한 ESG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일부 외부 평가를 위한 경영보다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응적인 선택도 필요하다. 예컨대, 기관 특성상 발전사는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인 스코프 1의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지 않는 기관들은 스코프 1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이 없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통일성을 위해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인 스코프 2만을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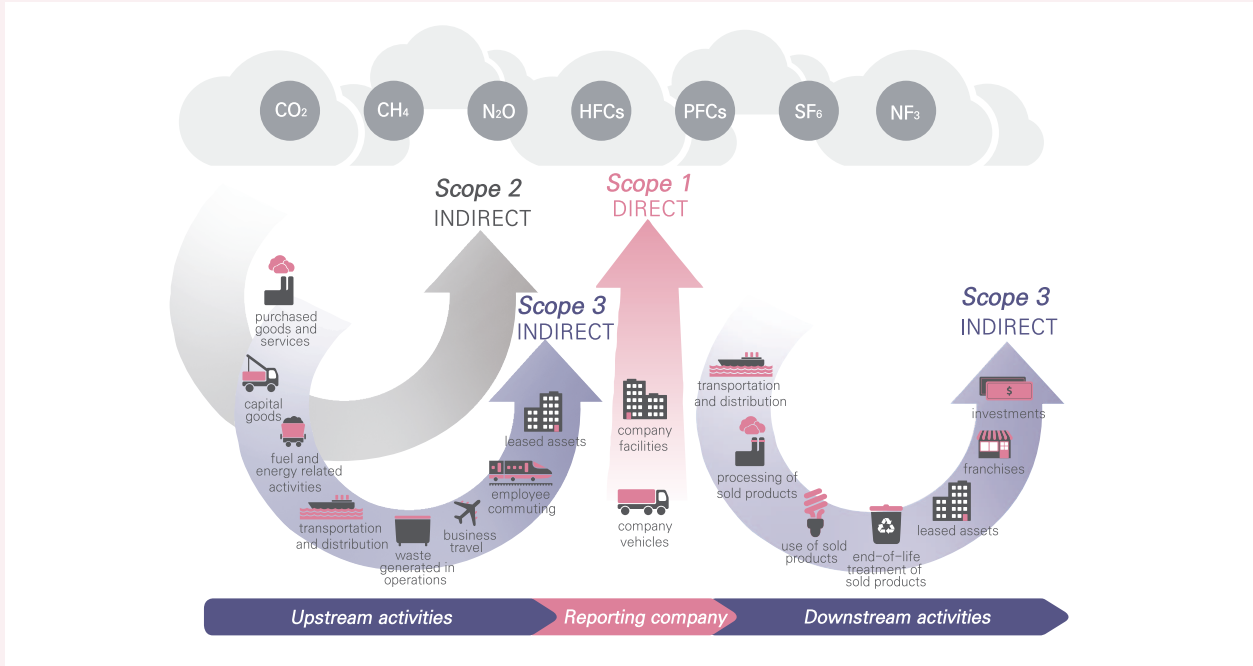
표 1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구분	EU(유럽연합)	미국	IFRS재단
공시기준 명칭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ESRS) / EFRAG	Climate-Related Disclosure / SEC(증권거래위원회)	IFRS S1, S2
적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전반 향후 산업별, 기업별 세부 지표 공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관련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기후 관련 공시에 제한 단계적으로 ESG 전반으로 확장 예정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관점(이중중요성) data points 등 구체적인 공시기준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자 관점(단일중요성) 기회요인, 재무적 영향 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자 관점(단일중요성) 스코프 1~3, 산업 특성 및 기후 관련 목표 공시 강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대상기업 : 약 50,000개] 기업 규모별 EU 역내 전 상장사 연간 순매출액 4,000만유로, 자산총액 2,000만유로, 250명 임직원 → 이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비상장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상장기업 및 향후 비상장 자산을 포함해 SEC 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정보공개 대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발적 기준 적용을 권고 국가별 적용 기준에 따라 상이
시행계획 (첫 보고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공시(2024회계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공시(2023회계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가이드 발표 후 G20 국가별 적용
검증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 3년 차까지 제한적 검증 적용 6년 이후에는 합리적 검증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 대기업과 상장 중기업은 스코프 1·2 배출량에 대한 제한적 검증을 단계적으로 도입 4년 차에 합리적 검증 입증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공시 내용 전반에 대한 외부 감사 요구

자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그림 1 스코프 1~3의 정의



주: 스코프 1은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2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 스코프 3은 협력업체와 물류, 사용, 폐기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배출량을 의미함

자료: GHG Protocol

가지표로 활용한다. 발전사는 스코프 1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스코프 2를 관리하면 평가지표상 유리한 점수를 받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평가기관과 기준제정기관 역시 알고 있어, 점차적으로 산업 특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변경하거나 변경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도 현재 평가체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ESG 활동의 기초를 다지고 장기적인 미래를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기관 특성을 반영한 ESG 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ESG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도 많은 공공기관이 ESG 활동 및 공시를 홍보나 마케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기관의 경영자는 외부 ESG 평가나 등급이 낮을 경우 ESG 공시 담당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ESG 홍보나 평가 등급을 높게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ESG 활동을 보고하는

프레임워크이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재무제표와 동등한 위치에서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재무적 가치에 비추본다면 회계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이 적자를 보고했다면, 적자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재무제표 작성자인 회계담당자가 아니라 경영활동 전반을 책임지는 경영자에게 있듯 ESG 성과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경영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역시 당장 공공기관이 도입하려면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잘만 활용한다면 작게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수단이 될 것이며 크게는 사회 전반의 가치를 높이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주요국의 공기업 국가지주회사 현황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단일의 소유권 기관에 집중하거나 조정기관을 통해 행사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중앙집중형 소유권 기관은 ①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정부부처형 소유권 기관과 ② 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 형태의 국가지주회사(state-owned holding companies: SOHCs)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영국, 그리스, 오스트리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 자국의 공기업 관리를 전담하는 국가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소유인 공기업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공공경제』 Vol. 14에서는 최근 주목받는 국가지주회사의 정의, 특징, 구조 및 유형, 그리고 주요국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지주회사의 정의

지주회사(holding company: HC)는 자체적으로 생산, 영업 또는 기타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사모펀드, 헤지펀드, 주식, 채권(국채, 공채, 지방채 등), 부동산, 특허권 등의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지주회사의 역할은 경영진에 대한 감독 및 지원, 리스크 관리 기준 설정 및 기업 전략에 부합하는 적합한 인력의 적절한 직위 배치 등이다.

지주회사가 소유한 자회사(subsidiary companies)는 제조, 판매 또는 기타 사업을 수행하며, 이러한 자회사는 운영 계열사(operating companies) 또는 산하 회사(portfolio companies)로 불린다.

국가지주회사는 국가의 ① 새로운 공기업 소유 또는 재정적 지원, ② 지분 취득을 통한 기존 공기업 합병, ③ 공기업 재원에 대한 통제권 확대, ④ 경영 모니터링을 통해 공기업 경영진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따라서 국가지주회사는 주요 경제 행위자 및 핵심 산업에 대한 통제와 영향력 행사를 위해 국가 전략기업 지분의 과반수 또는 소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정부를 위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국가지주회사는 정부와 공기업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해 공기업 운영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제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지주회사는 재정부(또는 재무부)의 소관하에 운영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독립된 정부 기관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강석훈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본 원고는 2022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9차 OECD 공기업작업반 국제회의의 ‘공기업 국가지주회사’ 세션의 토론 내용과 OECD 및 개별 국가들의 발표 자료, 개별 국가지주회사들의 연차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한 것임

국가지주회사의 특징

국가지주회사의 설립은 공기업 소유권을 정부의 직접 소유에서 간접 소유로 이전함을 의미한다. 많은 국가가 국가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 기능과 공기업 관리의 기능을 분리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기능 분리는 탈정치화를 허용하고 공기업에 더욱 큰 독립성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국가지주회사는 외부 기관투자자로서 소유주 대표의 자격으로 공기업이 사회적 목표 달성의 부담을 덜고 기업 및 재정 지배구조를 개선하며 자회사들이 더욱 유연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반면 다른 정부 기관들은 규제 책임의 무게를 받게 된다. 초기 국가지주회사는 공기업에 시장경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설립됐는데, 공기업 민영화 기초 단계 또는 저성장 공기업의 수익 확대 등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지주회사의 설립이 공기업 관련 소유권 및 관리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소유권의 중앙집중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이유 또는 국가지주회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p>정치적 이점 공기업 부문의 재편성 또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정책 다각화 가능</p>	 <p>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공기업 업무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간섭의 범위를 최소화</p>	 <p>이해충돌 축소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 기능과 정책 수립 및 규제/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방지하거나 최소화</p>
 <p>전문성 제고 경영과 기술적 측면에서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 유치를 통해 공무원 순환제로 인한 전문성 부족을 최소화하고, 공직보다 우수한 최신 채용 시스템 및 교육 시스템 운영을 통해 전문성 제고 가능</p>	 <p>기업가치 극대화 다수 공기업이 지주회사 산하로 그룹화되면 집단협상력, 조달 집중화 및 은행과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투자효율화 확대 가능</p>	 <p>시너지 효과 특정 산업과 업무별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 및 시너지 효과 창출</p>
 <p>기업 경영관리 향상 일관적인 투자, 배당, 인사, 조달, 감사 정책의 기준 수립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업 관리 가능</p>	 <p>인적자원관리 개선 민간과 유사한 인센티브와 커리어 개발로 우수한 인재 유치 및 양성</p>	 <p>재정적 유연성 및 자금조달 비용 절감 향상된 협상력으로 은행 및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더 용이해지고 보다 효과적인 부채 관리 가능</p>
 <p>우발적 위기에 대한 대응력 향상 지주회사는 여러 산업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우발적인 위기에 보다 즉각적 대응 가능</p>	 <p>브랜드화 및 브랜드 형평성 극대화 민간과 같이 단일 브랜드 아래 더 높은 신용점수 및 고객신뢰성 확보 가능</p>	 <p>세금 혜택 통합세금신고서 제출을 통해 세금 우대 혜택 가능</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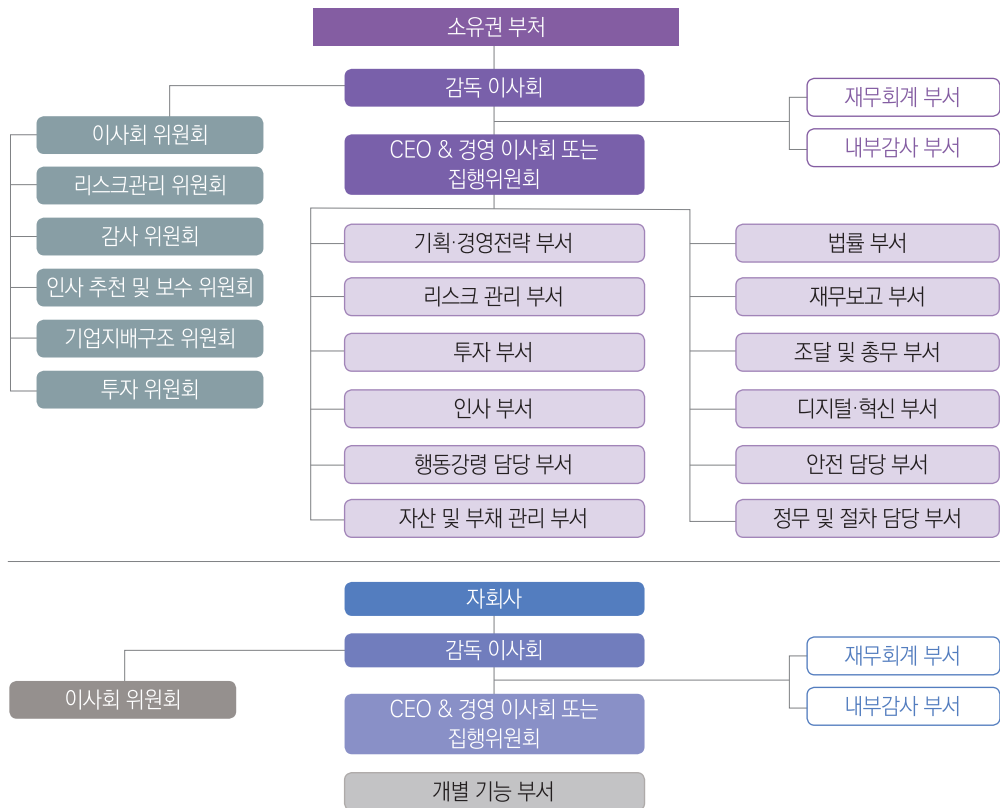
자료: OECD 제39차 공기업작업반 회의 자료

이외에도 국가지주회사의 설립은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 이해관계자 문제 해결,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여러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주회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먼저, 국가지주회사는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 상한선이나 기타 정부의 준재정 운영 대상이 되는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무 거버넌스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한계로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공기업만 지주회사 산하로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가 더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정보비대칭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 지주회사의 임원이 공기업 전문가가 아닌 민간회사 전문가라는 점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해 공기업 관리와 정부 대응에 더 취약할 수 있다.

국가지주회사의 구조와 유형

국가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최상위층에 있고, 그 밑으로 개별 공기업들

[그림 1] 일반적인 공기업 국가지주회사의 조직구조



자료: OECD 제39차 공기업작업반 회의 자료

이 그룹화되어 분포하는 수직적인 구조이다. 공기업의 주요 소유주는 재무부, 주무부처, 총리실 등을 포함한 행정부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주회사 규모는 낮은 관리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작은 규모로 우선 설립된다. 일반적인 국가지주회사 모델은 지주회사 CEO를 중심으로 경영진과 이사회가 각 공기업 경영진에게 전반적인 지침과 경영 방향을 전달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정부는 지주회사의 투자 및 사업상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주회사는 자산 소유자 및 적극적인 투자자로서 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신중하고 유연하게 산하 계열사들을 관리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은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지명하며, 민간과 공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CEO와 함께 국익 보호라는 법적 책임을 수행하고 지주회사를 상업적 기반으로 운영하며,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실행한다.

OECD는 국가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배력을 바탕으로 국가지주회사를 순수형, 혼합형, 중간형, 임시형 등 4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먼저 순수형 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주식 소유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지주회사로, 다른 사업 과정이나 공기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둘째, 혼합형 지주회사는 기업 자산 통제 및 공기업의 경영에도 관여한다. 셋째, 중간형 지주회사는 한 기업의 지주 역할을 하는 동시에 더 큰 기업의 자회사인 형태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임시형 지주회사는 이미 다른 기업의 통제를 받고 있으면서 계열사를 보유하는 지주회사 형태이다.

〈표 1〉 국가지주회사 유형

유형	순수형	혼합형	중간형	임시형
주 소유주	재무부	총리	주무부처	
소유권 종류	전체 또는 과반수 소유		소수 지분 소유	
소유권 행사	직접(또는 연계) 행사		간접 행사	
법적 형태	주식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특수목적기업	공법 기관
기능	계열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민간기업 형태		정부의 전략적 투자자처럼 활동하는 투자회사 형태	
책임	능동적		수동적	
국가와의 관계	독립적	적절히 독립적	가까움	
관리 범위	모든 공기업	대부분의 공기업	특정 산업의 공기업	
사회적 목표	최소로 수행	수행	수행	
운영 모델	완전형 국가지주회사	산업형 국가지주회사	전략형 국가지주회사	

자료: OECD 제39차 공기업작업반 회의 자료

대부분의 공기업 국가지주회사는 혼합형으로 존재하며, 민간기업 형태로 계열사들의 자산을 운영하거나 투자회사 형태로 정부의 전략적 투자자로 활동하는 등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국가지주회사는 보유 계열사 수, 법인 형태, 투자 형태, 경영진 형태

등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국가지주회사를 투자 형태로 구분하는 경우, 적극 투자형 지주회사는 싱가포르의 테마섹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아직 투자 권한이 없는 영국의 UKGI는 소극적 또는 관리형 지주회사로 볼 수 있다.

주요국의 국가지주회사 현황

최근 10년 사이에 영국, 오스트리아, 그리스,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여러 국가가 기존 재무부에 의한 공기업 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국가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했다. <표 2>는 주요 국가의 국가지주회사 현황을 간략 설명하는 내용이다.○

<표 2> 주요국의 국가지주회사 현황

국가	지주회사 명칭	담당 정부부처	유관 산업 분야	총 기업가치	자회사 수 (총기업 수) ¹⁾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홀딩스그룹(OBAG)	재정부	에너지, 전력, 통신, 부동산, 카지노, 연기금 등	€ 34.7bn (2021년)	11(28)
핀란드	솔리디움(Solidium)	총리실 산하 공기업관리실	통신, 철강, IT, 운송 등	€ 9.3bn (2021년)	12(42)
그리스	그리스국부펀드국유재산관리기구 (HCAP)	재정부	에너지, 상하수도, 인프라, 통신 등	€ 6bn (2021년)	15(39)
헝가리	(주)헝가리국가자산관리공사 (MNV Zrt.)	국가개발부	부동산, 교통, 유통, 광업, 에너지, 제조, 급수, 상하수도, 카지노 등	€ 39.8bn (2021년)	332(350)
카자흐스탄	삼룩카지나(Samruk-Kazyna)	재정부	통신, 항공, 건설, 우편사업, 에너지, 광업 등	\$64bn (2021년)	69(25,111)
말레이시아	카자나국영기업 (Khazanah Nasional)	재정부	소비재, 에너지, 보건, 제조, 통신, IT, 언론, 부동산 등	\$36.8bn (2021년)	31(87)
페루	공기업국가기금(FONAFE)	재정부	공익사업, 에너지, 위생, 금융, 인프라, 교통 등	-	35(36)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 Holdings)	재정부	금융, 교통운송, 산업, 통신, 언론, IT, 소비재, 부동산, 농업 등	\$408bn (2022년)	100(117)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국영지주회사(SSH)	재정부	에너지, 금융, 교통운송, 인프라, 관광 등	€ 10.8bn (2022년)	52
스페인	SEPI(Sociedad Estatal de Participaciones Industriales)	재정행정부	우편사업, 식품 유통, 농업, 통신, 조선, 금융, 에너지, 광업, 스포츠 등	€ 14.8bn (2022년)	124
영국	영국정부투자회사(UKGI)	재무부 (HM Treasury)	국방, 금융, 부동산, 우편사업, 방송통신, 운송 등	£1,165bn (2022년)	23

주: 1) 자회사 수는 국가지주회사 산하의 계열사 숫자를 의미하며, 총기업 수는 산하 계열사의 계열사들까지 포함한 공기업 전체 숫자를 의미함
자료: OECD 제39차 공기업작업반 회의 자료

글로벌 해운물류시장의 변화와 부산항만공사 해외물류사업

코로나19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지속적으로 발생 중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개별 제조기업을 넘어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생산·제조 부문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위기가 외적 영역인 해상·항만·물류 부문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가공무역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이 중요한 과제인데,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위해 최근 선진국은 Just-In-Time(적기공급)에서 Just-In-Case(적정대응)로 전체 관리체계를 재편 중이다.

[그림 1] 주요 글로벌 해운선사 최근 투자 동향



구자림
부산항만공사
글로벌사업단장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외 주요 선사 투자동향

국가 경쟁력 확보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공급망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세계 주요 국가는 자국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해운·항만물류기업을 중심으로 국제 물류기반을 재편하고, 글로벌 기업을 양성 중이다. 2020년 기준 컨테이너선사 선복량 1위인 덴마크의 머스크(Maersk)는 2016년에 글로벌 컨테이너 종합물류기업으로서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공급망 관리 등 엔드 투 엔드(End-to-End) 종합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CMA CGM은 2012년에 복합운송 서비스를 강화한 데 이어, 2019년에 세바로지스틱스(CEVA Logistics)를 인수해 종합물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물동량 창출 잠재력과 글로벌 물류시장 성장에 비해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분석 내용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물류시장은 약 9조 1천억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GDP의 5.6배이나,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6%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이 23.5%, 미국 18.4%, 일본 4.7%, 인도 3.9%, 독일 3.4% 등 상위 5개국 이 전체 시장 규모의 53.9%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법인·지사의 경우 미국 페덱스(FedEx)는 220개국 1,950개, 독일 쿨네앤드 나겔(Kuehne+Nagel)은 109개국 1,400개에 달하지만, 우리 기업 해외법인·지사는 CJ 대한통운이 40개국 279개, 현대글로벌비스가 35개국 84개 수준이다.

공공부문에서 우리 기업 해외 진출 확대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항만공사의 경우 공공 및 민간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 항만 관리 및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동반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대 항만공사인 부산항만공사는 국적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동반 진출을 통한 해외 항만·물류 시설 건설 및 운영으로 상생 협력과 국적 기업의 해외 물류 경쟁력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외 항만공사의 유사한 해외사업 추진 사례를 먼저 살펴본다.

1)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공사(Port of Rotterdam Authority)

로테르담 항만공사는 과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1990년대 이후 항만인프라 확장 및 해외투자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해 항만의 지분구조 및 경영체제를 공사로 전환한 이후 다양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해외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 내 'International Department'를 신설했으며, 로테르담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 개발·운영을 비롯해 해상운송까지 사업 범위를 점차 확대했다.

현재 로테르담 항만공사는 지분 투자 및 합작법인(JV) 설립 등을 통해 해외사업을 적극 진행 중인데, 대표적으로 오만 소하르항과 브라질 폐생항을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수소 공급망 구축을 비롯해 철강산업의 리사이클링 등 친환경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2] 로테르담 항만공사 해외사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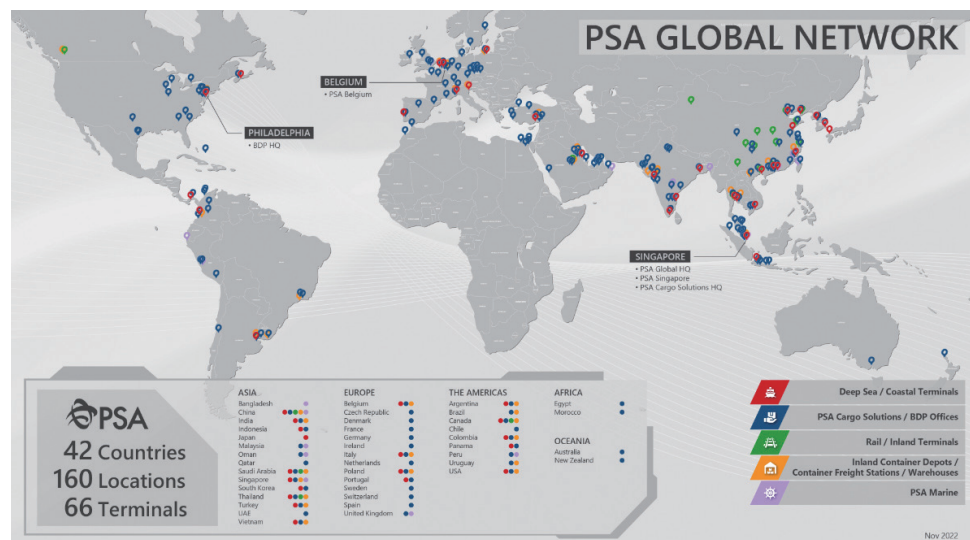


자료: 부산항만공사

2) 싱가포르 항만공사(Port of Singapore Authority)

싱가포르는 국토 면적이 협소해 기반시설 확충보다는 운영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통해 각 물류시설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연구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1997년 민영화 를 통해 항만 당국과 항만운영기업을 분리하는 정책을 실시해 기존 싱가포르 항만공사를 MPA(Maritime & Port Authority)와 PSA Corporation으로 구분해 신설했다. PSA

[그림 3] 싱가포르 PSA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자료: PSA 홈페이지

Corporation은 항만공사(Port Authority) 개념이 아닌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lobal Terminal Operator: GTO)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다수의 항만운영업체가 터미널을 운영하는 체제를 허용하지 않고, 독점적인 체제를 유지해 PSA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항만 개발 및 운영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PSA는 지난해 기준 19개국 대상 약 50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는 세계 1위 터미널 운영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산항만공사의 해외사업

부산항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을 통해 세계 2위 환적 허브항 및 7위 컨테이너 처리 항만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 컨테이너 부두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 항만인프라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년 전부터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수요가 높은 해외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물류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인데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스페인 바르셀로나항,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프로볼링고항 배후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을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1)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

부산항만공사는 유럽 최대 허브항인 로테르담항 항만배후단지 내에 30,000m² 규모의 물

[그림 4] 로테르담 물류센터 위치 및 전경



류센터를 직접 건립해 2022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개장 2년 차인 현재 약 15개의 우리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이용 중인데 최근에는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행 선적 거부 등 수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던 우리 기업이 물품을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로도 활용했다.

2) 스페인 바르셀로나 물류센터

스페인 바르셀로나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가 현지 합작법인(B2B Logistics)을 설립하고 기존 물류센터를 임대해 우리 물류기업에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물류센터는 바르셀로나항 배후단지(ZAL) 내 약 9,300㎡ 규모로,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그림 5] 바르셀로나 물류센터 위치 및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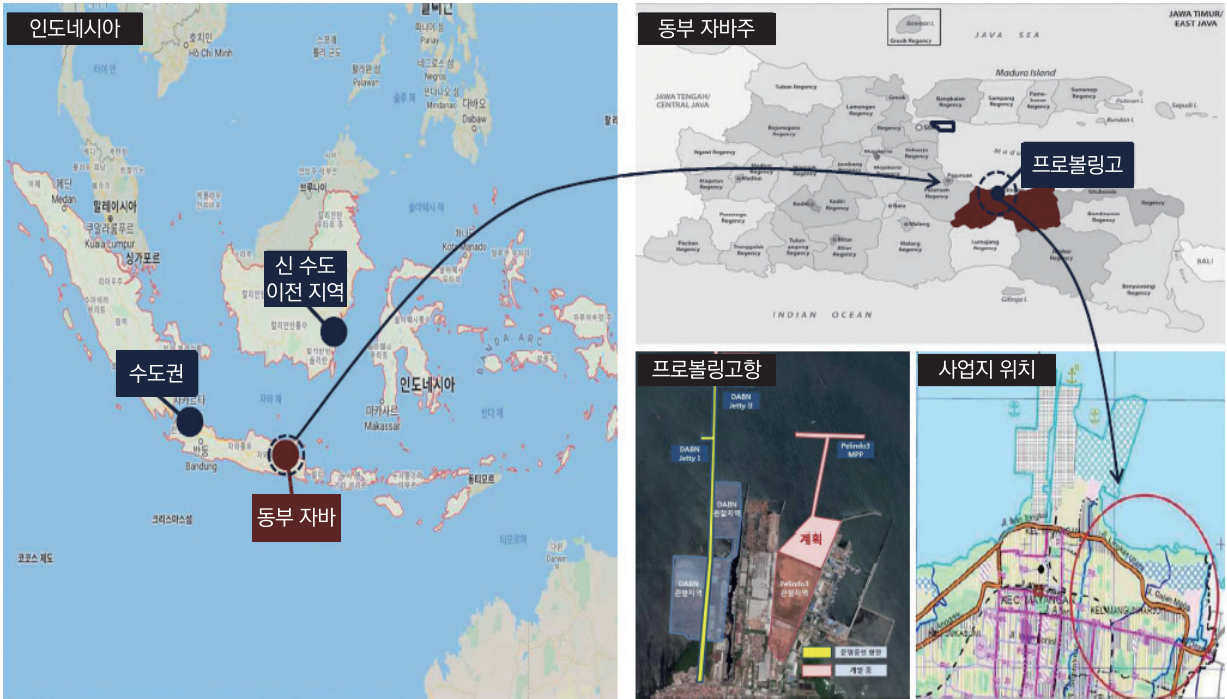


자료: 부산항만공사

3)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보세창고

부산항만공사는 신남방 주요 대상국인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한상기업인 코린도그룹, 국내 인프라투자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합작법인

[그림 6]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보세창고 위치도



자료: 부산항만공사

PLC(Probolinggo Logistics Center)를 설립해 2021년 9월부터 보세창고를 운영하면서 내륙 운송, 항만 하역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항만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부산항만공사는 앞에서 소개한 사업 외에도 국내 건설사, 물류기업과 협업해 부산항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교역이 많은 국가인 미국 내 물류플랫폼을 확보하는 사업과 이라크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알포항 컨테이너 부두 운영위탁사업 제안도 추진 중이다. 부산항만공사의 해외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종합물류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항만 물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단순한 해외시장 진출이 아닌 화주 및 물류기업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화주, 물류기업, 선사와의 동반 해외사업 추진을 통해 국적 기업의 해외 진출 리스크를 완화하고, 부산항만공사의 해외 인프라 사업 역량 강화에 더욱 매진하고자 한다.○



· · · ·
음주운전
죽음으로
가는 길
정지신호는
없습니다

“뿌리치지 못한 음주운전의 유혹
그 유혹에는 정지신호가 없습니다.
한잔에서 시작된 과멸의 직진!”

주민참여 사업인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규제샌드박스 개선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산

추진 배경

- » 정부의 주민참여형 사업 장려 (REC 추가가중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풍력발전사업 중 주민참여형 추가가중치 인정사례 미발생
- 2017년 1월 주민 지분 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대정책 최초 도입 이후 제도적, 현실적 한계로 인해 실적 전무
-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기존 주식형에 국한됐던 주민참여 형태를 채권형으로까지 확대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추진

추진 내용

- » (방안) 지분형에서 채권형으로 지역주민 이익공유 구조 변경, 지역주민의 고정적인 투자수익 보장
- » (내용) 기존 주민참여형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존) 주식형

수익

지역주민에게 지분의 일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은 불확실한 수익구조에 대한 불만 존재

재원 확보

발전소 1km 이내 읍면동 주민들은 고액투자 및 개인별 투자재원 차입이 어려움

☞ 풍력사업 인근지역이 농촌지역으로 영세해 재원조달 난항

(개선) 채권형

채권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매년 고정적인 투자수익 창출 가능

유한회사 형태 마을기업 설립으로 재원조달/이익공유가 용이한 모델 구축

☞ SPC와 마을기업 간 채권 양수도계약 체결 가능 및 마을기업이 투자재원을 금융기관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확보 용이

- 규제샌드박스 신청 내용
 - 금융위원회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 서비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 신청 및 승인(2019년) **장기업 최초**
 - * 주민참여 지분이 아닌 채권 형태로, P2P 서비스를 통한 재원 확보 및 신재생사업 투자 시에도 주민참여형 사업 우대조건이 가능하도록 승인
- (STEP 1)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관리운영 지침 개정으로 주민 지분 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대정책 최초 시행(2017년 1월)
 - 태백 가덕산 풍력(43.2MW) 1단계, '최초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
- (STEP 2) 기존 지분 참여 주민참여형 사업 문제점 규제샌드박스 승인(2019년 4월)
 - SPC와 마을대표 간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 관련 합의서' 체결(2020년 7월)
 - (유한회사) 태백원동주민풍력(마을기업) 설립(2020년 8월)
- (STEP 3) 채권투자계약 체결(2020년 12월)
 - 한국에너지공단 정부금융지원 사업 주민참여자금 승인(33억원, 2020년 12월)
 - 주민참여자금 인출 → (유)태백원동주민풍력(2020년 12월)

추진 성과

» (재무적 효과) 주민참여형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마을기업과 간접 참여하는 태백시민은 매년 3.4억원, 사업기간 총 68억원 수익 창출

- 마을기업(인근 마을주민) 수익: 2억원/년, 사업기간 총 40억원(20년)
- 태백시민 펀드 수익: 1.4억원/년, 사업기간 총 28억원(20년)

» (정성적 효과) 국내 풍력사업 최초의 주민수익 극대화, 지역주민 수용성에 최적화 모델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 견인

-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더불어, 태백시민에게도 이익공유를 추진해 이익공유 대상 확대(국내 풍력 주민참여형 모델 중 유일)
- 저금리 정책자금[재생에너지 금융지원(주민참여자금)] 활용으로 지역주민 수익 극대화

* 주민참여자금 신청 사업 중 최초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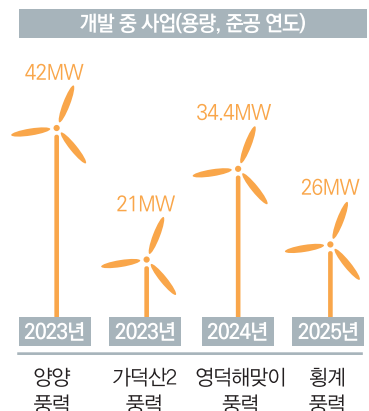
향후 계획

» (지역 지원) 가덕산풍력발전(주) 수익금을 활용해 농촌지역 삶의 질 제고

- 농촌지역 경쟁력 향상 지원: 비료 구입, 농기계 구매 등 지원
- 주민복지 제고: 마을 공동시설(유휴시설) 개보수, 비품 구매 등 지원
- 장학사업 지원: 발전소 인근 학교 장학금 지원, 학교 교구 구매 지원 등
- 마을주민 복지 지원: 마을 공동행사 시 소요경비 지원

» (사업모델 확산) 가덕산 풍력 주민참여형 사업 성공모델 고도화 및 개발 중인 풍력사업 프로젝트에 적용해 한국판 그린 뉴딜 성공 기반 구축

- 양양풍력(42MW) 등 4개 프로젝트 총 137.4MW에 적용을 위한 협의 중



빅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개선!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 수준으로 견인

추진 배경

- »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반복적인 교통사고 발생지점에 대한 집중 예방과 관리 필요
 - 자치경찰 등 지역사회와 협력으로 지역 중심 교통안전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개선 필요

- » 국내 고령 보행사망자 비율 지속 증가로 감소 대책 필요
 - 전체 보행교통사고 중 고령자는 약 59.0%로 높은 수준이며 지속 증가 전망
 - 고령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2019년 기준)

추진 내용

- » (교통사고 잦은 곳) 빅데이터 기반 지역 중심 교통안전 개선사업
 - 교통사고 약 21만건 분석, 교통사고 잦은 7,397개소 추출
 - 실시간 교통사고 모니터링, 차종별 및 보행자별 통행량 조사·분석
 - 교통인프라 개선 추적 데이터 분석으로 교통사고 취약지점 416개소 선정
 - 첨단장비(TSCV, 교통안전 점검차량)를 활용한 실제 도로환경 정밀조사
 - 스캐너, 카메라, 센서 등 탑재 차량 및 드론으로 교통신호기, 안전시설 등 도로 특성 데이터 수집·정밀분석
 -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빅데이터 기반 28개 대책 수립으로 교통안전도 제고
 -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반영,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9%(350개소 → 416개소) 확대
 - 사고 유형별 맞춤형 고도화 기법 적용으로 사고 감소 효과 제고
 - 안전시설, 지하구조, 교통운영체계 등 1,626건 개선



- » (고령보행자 사고위험 지점) 다양한 데이터 융합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향상
 -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 정책 분석 및 협업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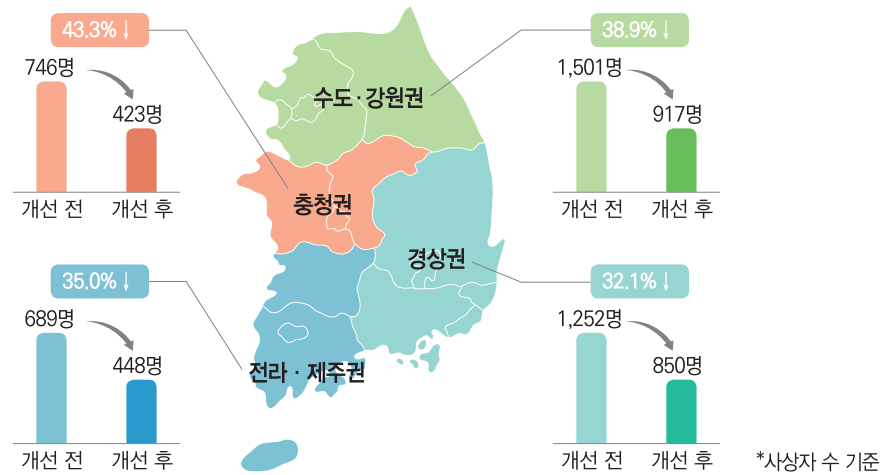


- 대내외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고령보행자사고 고위험지역 선정
 - (STEP 1) 고령자 유동인구 상위 1,000개 정보 추출
 - (STEP 2) 고령자 유동인구 상위 지역과 고령보행자 사고다발지 매칭
 - (STEP 3) 최근 3년간 고령보행자 사고다발지·보호구역 위치 분석
 - (STEP 4) 정부합동점검 대상지 선정
- 전국 60개소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지점 정부 합동점검으로 개선 대책 452건 수립 및 개선

추진 성과

» 지역 중심 교통안전 개선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52년 만에 역대 최저 기록(2,914명)

• 사고 잦은 곳 개선완료 지점 사망자 75.6%(41명 → 10명), 부상자 36.6%(4,147명 → 2,628명) 감소



»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 9.2%(7,729명 → 7,016명) 감소

향후 계획

» 기상데이터 등 기관 간 데이터 공유·융합 확대를 통해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대국민 교통안전 개선 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

» 데이터 기반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지 선정 및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

-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및 지점 선정 지침 등 지자체 보호구역 조례 개정
- 고령보행자 교통안전 대책 시행 대상지 및 안전시설 예산 근거 마련





공공기관 TALK

〈공공기관 TALK〉는 공공기관 현장의 소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기관장의 경영철학과 기관의 역할을 들어보는 ‘CEO인터뷰’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말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혁신도시 박람회’에서는 2017년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역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을 소개하고, 직원들의 미니인터뷰를 통해 근무·생활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잡(JOB)담’에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소개하고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았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에너지공단 담당자를 만나본다. 마지막으로 ‘나의 취업성공기’에서는 ‘2022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직무능력중심 채용 부문’ 당선작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일연구원 직원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공공기관의 다양한 이야기가 독자분들에게 흥미롭게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CEO인터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혁신도시 박람회

국토안전관리원

잡(JOB)담

한국서부발전(주) / 한국에너지공단

나의 취업성공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통일연구원







건강한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의 탈빈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학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주요 경력

2022~현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2019~2022 환경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위원

2013~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2018~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연금연구센터장

2017~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사회통합연구센터장

안녕하세요, 원장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인데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하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정해식입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립 역량을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취·창업과 자산형성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최저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현금 및 서비스를 지급하는 다른 급여와 달리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자활급여는 상담, 교육, 훈련을 통해 참여자의 자립 계획 이행을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통해 자활 일자리를 제공해 일 경험을 쌓고, 희망저축 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자산형성 교육과 재정을 지원하면서 자립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자활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16개 광역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은 자활지원 사업의 개발과 평가, 조사·연구 및 홍보,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역할 수행에 대한 지도·평가를 수행합니다. 보장기관의 자산형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 참여자와 자활기관 종사자에게 자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수행 과정에 필요한 자활근로, 자산형성, 교육훈련 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의무이자, 빈곤층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개발원은 다양하고 안정적인 자활 일자리를 만들고, 자활기업이 일반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개발원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고도화 정책의 공급주체로서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은 필요로 하는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원은 2010년부터 자산형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빈곤층, 청년에게 금융·자산관리를 교육하는 특화 자산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발원은 2022년 '자산형성포털'을 개통해 자산교육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다양한 교육 아이템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재정형성 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자활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서비스 제공 점점인 자활센터, 그리고 이를



일자

2023년 5월 26일(금)

장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본원 (서울)

대담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라영재 소장



취·창업과 자산형성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개발·지원



지원하는 개발원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개발원은 자활 사업에 대한 조사와 통계 생산, 연구포럼 개최를 통해 정책 방향 수립에 일조하고, 자활사업 성과 홍보로 우수한 자활사례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개발원을 어떻게 경영해 나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회통합, 행복과 삶의 질을 큰 연구 주제로 잡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으로 소득보장 제도로써 빈곤 정책, 연금 정책, 자활사업 등을 연구하면서 2018년 제1차, 2021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습니다. 자활사업 목표 수립을 위해 자활사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한계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원은 그간 자활 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키워왔고, 조직 구성원의 역량도 조금씩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는 지원기관으로서 개발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자활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계획-실행-점검-개선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외적 소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많은 국민께 자활의 역할을 소개하고, 그 성과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활사업은 우리 사회에 일의 소중함, 일을 통한 탈빈곤의 가능성을 자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변화시키고, 함께하는 자활사업의 성과를 우리 사회에 알리는 데 개발원이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취임식 때 개발원의 장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개발원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환경적,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자리를 개발할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돌봄·간병 사업에서부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방역, 소독 같은 사업까지 자활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 경험하는 문제 해결에 나섰고, 사회적 위험의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둘째, 자활기업이 지역의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일자리 제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자활사업단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장비, 시설 및 임대료 등 지원을 받아 창업한 자활기업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600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중 약 4,600여 명이 취업취약층입니다. 자활기업은 취업취약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고용 위기 상황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합니다. 개발원은 이러한 자활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해, 규모화, 지역특성화, 업종 간 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우리 광역자활 인프라와 함께 확장해,

취약계층의 생애주기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층 청년 대상의 자산형성 사업은 단순한 금융 상품만이 아닌 꿈, 희망, 미래를 제시하는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개발원은 체계적인 교육, 홍보, 관리를 통해 가입자가 3년의 가입자격을 잘 유지한 후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넷째, 자활사업 종사자 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하려 합니다. 참여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활 현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잦은 이직, 소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 지원을 통해 업무 자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섯째, 자활사업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료 분석과 연구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자체 연구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인데요, 빈곤층의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개발원이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빈곤율은 2차 분배가 확대되면서 점차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높은 노인 빈곤율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근로연령층의 빈곤율도 문제입니다. 근로연령층의 빈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낮은 사회이동성을 보이고, 여러 문제가 중첩되어 사회통합 저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연령층에게 희망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근로연령층의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빈곤층 중에서는 근로능력에 제약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제한된 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활 일자리는 이렇게 빈곤층의 여러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활 일자리에 참여하면 자활근로 급여를 받고, 또 사업단 매출의 일부를 자립성과금으로 받아 소득을 확보합니다. 자활 일자리를 통해 근로 역량을 키워, 창업에 나서거나 취업하기도 합니다. 자활 참여 중에는 자산형성 지원을 받고, 탈수급 시에는 내일키움장려금을 지원받습니다. 이렇듯 자활 일자리를 통해 탈빈곤에 이르는 희망사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위해 개발원은 민간, 공공, 사회적경제 영역과 연계한 자활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 12개 공공기관과 연계해 568명, 6개 민간기업과 연계해 1,699명,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력해 321명의 자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민간 기부를 받아 2022년 이후 자산형성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탈수급 장려금을 신설해 총 8,796명에게 2,111백만 원을 지원했고, 그 결과 청년자산형성 통장의 본인 저축률이 14.1%p 향상됐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원은 일을 통한 복지로서 자활 일자리 제공에 나서고, 자산형성

“환경적,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자리 개발”



자활 일자리 제공과
자산형성 사업의 활성화로
‘약자복지’ 실천



사업이 활성화하도록 노력해 ‘약자복지’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2020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는데요, 공공 기관으로서 개발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개발원은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친환경, 탄소중립 분야에서 일자리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자활사업단의 신(新)표준화 사업으로 선정하고, ‘에코워싱’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또 자활사업에 적합한 사업 모델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어르신, 취약계층 아동 대상 도시락 제공 서비스에서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다회용기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수거, 세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됩니다. ESG 경영의 가치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면서, 한발 한발 나아가겠습니다.

원장님 임기가 종료되는 3년 뒤 개발원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시는지와 함께 기관 직원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년 뒤 개발원과 직원들의 역량은 분명 지금보다 한층 더 성장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인재로 거듭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활 참여기관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자활사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성과와 한계를 환류하는 과정을 통해 내적 역량을 키울 것입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지역 자활 정책 포럼’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활 현장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근거를 바탕으로 울림을 만들기를 바라면서 개발원과 함께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자활 현장은 참여자, 보장기관,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자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원은 자활 현장의 사업계획과 성과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원이 중앙 자활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자활사업 발전에 이바지해, 자활사업의 큰 축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묵묵히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활사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우리 개발원 직원들과 자활 참여기관 종사자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공경제』 독자 여러분께서도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경제적 자립을 응원해 주시고, 개발원이 자활복지서비스 혁신 선도기관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에 의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자활, "스스로"
"힘"을 키우다 +

주요업무

자활사업 개발

-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 취업, 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인적자원관리

- 시·군·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연계, 해당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지원과 대상자 관리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자활인프라관리

-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 지역·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 자활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
-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 대표전화 02-3415-6900



생명의 소중함,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



학력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대학원 의학 석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대학원 의학 박사

주요 경력

2020~현재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
1987~2020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교수
2017~2018 대한이식학회 회장
2015~2016 대한혈관외과학회 회장
2008~2010 대한혈관외과학회 이사장

안녕하세요, 원장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에 국민 생명을 살리는 기관의 중요성도 높을 듯합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세요.

우리는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현대 의학의 발전과 기증, 이식이라는 생명나눔을 통해 새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뇌사는 안타깝게도 뇌를 다쳐서 어떤 치료를 해도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이룹니다. 소생 가능성은 없지만 아직 정상적인 장기를 가진 뇌사추정 자로부터 장기를 기증받아서, 장기가 나빠서 죽음만 기다리는 다른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바로 장기기증입니다. 중간에서 이들의 생명과 생명을 잇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Korea Organ Donation Agency)입니다.

우리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뇌사추정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 발생 시 이를 병원으로부터 통보받아 이식대기자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보호자를 만나 상담하고, 정보를 알려 드리며, 또 환자를 관리해 기증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전문 장기구득 코디네이터가 이 일을 수행하고요. 기증 이후 마음 아픈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우수 수준의 KODA LAB(진단검사의학과의원)을 24시간 운영하며, 뇌사기증자와 이식대기자의 장기이식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뇌사추정자 평가부터 관리, 수술 등 기증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랜 의사 생활을 마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11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기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공감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40년을 외과 의사로 수술하면서 장기기증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증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고요.

특히, 코디네이터들은 연락이 오면 즉시 출동해야 하는 숙명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에도 연락을 받으면 근무하러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병원 외에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경찰 등 여러 기관이 긴밀히 움직입니다. 코디네이터들이 방문하는 병원은 전국에 400여 개에 이릅니다. 기증자를 관리하면 평균 2박 3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지내기 때문에 기증이 종료되고 나면 피곤이 끝까지 몰려옵니다.



이 CEO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하였음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생명과 생명을 잇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무엇보다 기증은 매번 똑같지 않습니다. 기증자의 살아 온 삶이 다르듯, 그들이 가는 모습도 다양각색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동의권자를 찾아내지 못해 기증을 놓치기도 하고,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떼지 못해 기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증을 시작하면 모든 과정이 어렵지만, 무엇보다 동의 받는 과정이 가장 어렵다는 점이 코디네이터들의 의견입니다. 밤낮없이 한 분의 뇌사자라도 가족의 동의를 받아 이식수술을 하려고 열심히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코디네이터의 생활에서 저는 우리나라를 이끄는 젊고 활기찬, 희망의 열정을 느낍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곳에 온 후 제가 느낀 아주 커다란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 어렵게 결정한 기증자의 송고한 나눔으로 아픈 환자 몇 명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기증에 관한 인식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증 현황은 어느 수준이라고 보면 되나요?

남에게 베풀기 좋아했던 김수환 추기경님은 2009년 2월에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각막을 기증하며 나눔을 실천하셨고, 그 아름다운 나눔이 전 국민에게 울림이 되어 전국적으로 기증 희망 등록이 30% 이상 오르는 성과를 거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최요삼 선수의 장기기증 이후에도 기증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이 있던 2009년만 보더라도 기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소하고 거부감이 먼저였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기증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기증 의사는 아직도 낮은 편입니다. 뇌사 장기이식이 활성화되면 평균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사후에 조직기증을 하면 100여 명에게 피부와 뼈 등을 나눠 줄 수 있습니다. 2022년 IRODaT(International Registry in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에 따르면 세계에서 장기기증을 가장 많이 하는 미국의 2021년 인구 100만명당 뇌사 기증자 수는 41.6명, 스페인은 40.8명인데, 우리나라는 8.56명으로 아직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장기기증을 주저하는 유가족도 적지 않습니다. 2022년 통계에 의하면 뇌사추정자 통보가 2,163건 발생했지만, 그중 405명만이 기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123만명의 자원봉사자 물결이며, 펄 벅 여사가 한국에 와서 감동한 부분이 고적이거나 왕릉이 아닌 우리 선조의 배려임을 늦가을 까치밥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계기만 되면 마치 큰

과도를 일으키듯 전 국민이 단결해 타인을 위하는 마음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주위 동료나 부하를 위해 목숨을 포기한 이원등 상사, 강재구 소령, 구례 운조루의 ‘타인능해(他人能解)’라는 뒤주를 만든 이름 모르는 옛 어르신, 경주 최 부자의 주위 사람을 위한 마음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이타적인 삶을 사신 어르신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이라서 기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식받은 환자가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한다면 더 큰 선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타인을 배려한 숭고한 이타 정신은 우리 사회가 존중하고 지켜줘야 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증이 활성화되면 무엇이 좋아지며, 국민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아질까요?

우리나라 국민 약 5천만명 중에서 1년에 약 30만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은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소위 급성 혹은 만성 말기 장기 부전증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다 사망하는 환자가 많다고 보고합니다.

장기이식만 받으면 생명과 건강을 얻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자들(장기이식 대기자)이 이미 4만여 명이 넘었다고 보고됩니다. 기증자는 적는데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하루 평균 약 8명이, 1년이면 2천여 명이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통계가 현실입니다.

또한,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 입장에서도 기증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이라는 숭고한 결정을 내려 준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는 내 가족을 그대로 떠나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의 일부라도 어디선가 살아 숨쉬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고자 기증을 결심합니다. 많은 기증자 유가족분이 기증을 통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닌, 어디선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위로받고,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2월, ‘심장이식을 받아 새 삶을 사는 수혜자가 공여자 모친을 찾아가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이야기’를 노래한 보니 레이트(Bonnie Raitt)의 ‘just like that’이 그래미 어워드 ‘올해의 노래’로 선정됐습니다. 참 가슴 뜨거운 일이지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네요. KODA의 주력 사업을 소개해주세요.

일선 현장에서 의료진과 함께 생명나눔의 소중함과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Donation

“
밤낮없이 열심히
코디네이터 활약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희망의 열정 느껴





기증을 고민하고
동의해 주신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자 큰 이타적
마음



Improvement Program: DIP)을 교육하고 홍보합니다.

물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국민 관심과 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9월 둘째 주를 ‘생명나눔 주간’으로 정해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을 상징하는 색은 초록색인데, 우리는 생명나눔 주간에 전국 주요 대교와 랜드마크에 초록 불을 점등하는 ‘생명나눔 그린라이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캠페인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병원 등 모두 81개 기관이 참여했고, 전국 주요 건물 38곳에 생명나눔을 상징하는 녹색 점등이 이뤄졌습니다.

단순히 녹색 불빛 밝히기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 공공기관, 병원, 민간기업 등 많은 단체와 함께 장기기증을 상징하는 녹색 리본 걸기, 현수막, 계단 래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유가족을 위해 전문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가족지원팀을 통해 장례 절차 안내, 사후 행정 처리 절차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가족의 마음 치유를 목적으로 상담을 통한 다양한 정서적 지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기증하신 분은 이식받은 분이 건강히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식받으신 분은 주신 분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서로를 연결해 드리는 ‘희망우체통 서신 교환 사업’을 지난해부터 국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기증과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한 기증을 고민하고 동의해 주신다는 것은 감히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자 큰 이타적 마음일 겁니다. KODA는 이러한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잘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대한민국이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남기느냐, 또 사람이 죽으면 정말 이름만 남기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삶의 끝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순간이 왔지만, 그 순간에 기증이라는 생명나눔으로 누군가에게 새 생명을 주고, 내 몸의 일부도 살아 숨 쉴 수 있다면 나는 죽음 이후에도 이름만 남긴 것이 아니라 살아 숨 쉬며, 아름다운 나의 이름을 많은 이가 기억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명나눔

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가지 끝에 남아 있는
가장 좋은 과일은 먹지 않고
씨과실로 다시 땅에 심었다고 합니다.
땅에 심어서 새싹으로 키워내고,
다시 나무로, 숲으로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희망을 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눔도 이와 같습니다.
살아서 또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 주세요.

지금, 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눔은 어떤 치료를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뇌사상태인 경우에
타인을 위해 행하는 숭고한 나눔입니다.



KODA 홍보대사
오수진 KBS 기상캐스터
(심장이식수혜자)





경남 혁신도시, 국민의 안전과 상생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끈다

— 국토안전관리원 사람들을 만나다 —

경남 혁신도시는 우리나라 국토 균형발전의 거점이자, 진주 지역의 산·학·연·관 클러스터에 조성한 미래형 도시이다. 경남 지역은 장기적으로 주택, 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분야의 혁신클러스터를 실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상생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과 기존 지역 공동체의 상호 협력이 사회공헌활동으로 이어지며 지역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번 호는 2017년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토안전관리원 사람들을 만나본다.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남 혁신도시의 약속

경남 혁신도시는 진주 역사상 가장 큰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이자, 주택, 건설 및 안전 분야 기관의 결집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탄생했다.

경남 혁신도시 발전계획(2018년)에 따르면, 혁신도시 인근에 건설과 안전 분야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이전 공공기관, 기업 그리고 연구소 간 협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해 핵심 기술의 R&D와 기술사업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창업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또한 다수 양성하고 있다.

경남 혁신도시는 진주시와 조화를 이루며 경남 지역 발전의 중추이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천 지역의 항공부품, 소재, 항공정비(MRO)와 함께 고성외 무인항공기 등 설비를 기반으로 항공우주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신소재 분야의 산학연 클러스터,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같은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예정이다.

2019년 항공우주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라 구도심과 혁신도시를 연계하고, 대학 내 계약학과와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총 11개이다.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주택건설 분야 3개 기관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3개 기관이 이전했다.

또한 진주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각종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중앙관세분석소, 한국남동발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5개 기관이 이전했다.



Mini Interview

경남 혁신도시와 나의 삶



전지훈 국토안전관리원 인재노무실 부장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인재노무실에서 근무하는 전지훈입니다. 입사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경영관리실 법무팀,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준비단을 거쳐 현재는 노무관리와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 경남 혁신도시로 이주했고, 2018년부터 진주에서 태어난 아들과 함께 가족 모두 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생활의 장·단점은?

경남 혁신도시의 장점은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로 1시간 정도면 산과 바다에 닿을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서울에서는 하지 못했던 가족 나들이를 지금은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단점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소아과 병원이 많지 않아 병원 예약하기가 늘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전 전과 후의 근무 경험을 비교한다면?

이전 후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짧아졌습니다.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걸렸다면, 지금은 10분이면 직장에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이나 여유로운 티타임이 가능해져서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출장을 다닐 때 대중교통이 많지 않아 다소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가 더욱 활성화되어서 이런 점들이 해소됐으면 합니다.

혁신도시와 함께하는 당신의 미래는?

다른 혁신도시 사정을 잘 알지 못하지만, 경남 혁신도시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 병원, 극장 등 생활시설이 늘고 있고, 인구 유입도 많아져서 현재는 진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 됐습니다. 큰 변곡점이 없는 이상 앞으로도 경남 혁신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남 혁신도시가 발전하는 것처럼 업무 역량을 더욱 키우고, 자연을 벗 삼아 취미활동을 즐기면서 제 삶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계속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Mini Interview

'에나' 좋은 진주

이지승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성능연구소 선임연구원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풍요롭고도 여유로운 진주시민 이지승입니다. 현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성능연구소 기술개발실에 근무 중입니다. 처음 경남 혁신도시로 이사 왔을 땐 아는 것이라곤 지명뿐이었는데, 7년 차가 된 지금은 진주에서 매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에나'는 '진짜, 정말'이라는 뜻의 진주 사투리인데요, 진주가 에나 좋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는 취미를 영화 감상과 독서라고 말할 정도로 몸을 움직이는 활동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진주에서는 회사와 집만 왔다갔다 하다보니 건강도 나빠졌어요. 그래서 남강변을 따라 걷고 뛰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이젠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버킷리스트였던 인천-부산 자전거 국토 중주를 직장 동료들과 완주했습니다. 9월에는 듀애슬론 경기에도 나갈 생각이예요. 진주는 자전거를 안 타면 후회할 정도로 여건이 좋아요!

이전 전과 후의 근무 경험을 비교한다면?

이전 전과 후 업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대신 주거환경이 달라지다 보니 출근 거리가 정말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차로 20~30분이 걸렸다면, 지금은 느긋하게 걸어서 30분이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변화는 점심시간에 산책하기입니다. 회사 앞 영천강변을 따라 산책하는 혁신도시 근무자들이 정말 많아요. 혼자 산책을 나서면 나중에 무리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입사한 분들이 많았으니 다양한 말투를 지닌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서 꿈꾸는 당신의 미래는?

제2의 고향 경남 혁신도시! 정착하기까지 정말 힘든 일과 즐거운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힘든 일은 좀 빠지고 즐거운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도시 내에서 해결되는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없는 게 없는 깨끗한 이 도시가 참 편하고 좋습니다.

안전한 시설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를 지나 선진국 정식 진입을 앞둔 2020년,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점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 새롭게 출범했다. 하지만 기관 출범 원년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국토안전원의 전신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설립된 1995년으로 볼 수 있다.

국토안전원은 교량, 터널, 댐, 상하수도, 건축물 같은 국가 주요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 등 시설물 관리주체와 민간기업을 기술적·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그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일부 시설물은 국토안전원이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다. 기관 통합을 계기로 건설공사의 감리 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하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높은 곳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이나 해체공사가 필요한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업무도 수행한다. 이렇듯 국토안전원은 시설물을 짓는 단계에서부터 사용하는 단계, 없애는 단계까지 시설물 생애주기에 맞춰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근래에는 지하시설물의 노후화로 지반이 침하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시설물을 만들기 위한 터파기 공사, 터널공사와 같이 지하를 굴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도로 및 보도의 하부를 탐사해 지반침하가 발생할 가능성 있는 지역을 사전에 찾아내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분석플랫폼 '빅토리(bigTori)'를 개발해 관련 산업의 기술적인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을 넘어 사용성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최근 경향에 따라, 시설물의 가치를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도 적극 동참 중이다.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첨단 안전산업 육성

국토안전원은 경상남도, 진주시와 협력해 진주시를 안전산업의 중심으로 키우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시설물 안전 관련 첨단기술의 실용성과 적응성을 검증하는 공신력 있는 ‘실증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해 기술을 개발하는 민간기업이 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첫 단계로 지역의 폐교를 활용해 시범사업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산업 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경상국립대학교 등 지역대학에 전문과정도 개설했다. 교과목과 전문 강사를 늘리고, 교육 범위도 점차 확대해 학생들이 실무 전문지식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과 함께하는 국민 안전 지키기

시설물 안전관리가 필요한 어린이집,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 시설물이 전국에 8만개가 넘는다. 이러한 시설물은 최소 2년에 한 번 점검이 필요하지만, 국토안전원의 점검 전문가만으로 점검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안전원은 일하기를 원하고, 일할 능력도 있는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소규모 취약 시설물의 점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을 모집·교육해 ‘시니어 점



실증지원센터 사업장 구성도(사진출처: 저자)

검원’으로 양성하고, 소규모 취약 시설물 1차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1차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시설은 국토안전원 전문가가 2차 점검하는 체계로 운영해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힘쓰고 있다.

진주 지역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여성이 많이 거주한다. 국토안전원은 이들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 홍보물을 해당 외국어로 번역하고, 해외 진출 시 필요한 교육 매뉴얼과 교재를 제작하는 등 지역 취약계층과의 상생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플로깅(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에 안전을 더한 We-플로깅 사업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 We-플로깅은 플로깅을 하면서 지반침하의 징후도 함께 점검하는 친환경·안전·상생 캠페인이다. 일반시민들도 쉽게 지반침하 징후를 알 수 있는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



다량논 모내기 행사 참여(사진출처: 저자)



모모장터 VR 안전체험(사진출처: 저자)



남해안 비치코밍 행사(사진출처: 저자)

포하고, 지반침하 징후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살리기

국토안전원은 2019년부터 지역의 사회적기업, 전통시장 상인들과 함께하는 '모모장터(모으고 모이는 장터)'를 주도해 모모장터가 정기 행사로 정착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 밖에도 다랑논 살리기 프로젝트, 지역 해안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치코밍 등 지역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Mini Interview

보석만큼 아름다운 도시, 진주



위선영 국토안전관리원 홍보실 직원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국토안전관리원에 입사한 위선영입니다. 저는 홍보실에서 SNS 채널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입사하면서 부산에서 진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전까지 진주에 전혀 연고가 없었지만, 현재 진주와 친해지는 중입니다.

경남 혁신도시 생활의 장·단점은?

저는 다른 지방공기업에서 5년간 근무 후 새롭게 국토안전관리원에 입사하면서 경남 혁신도시로 왔습니다. 당시에는 변화기에 거주하면서 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는 있었지만, 인파와 교통 문제 등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경남 혁신 도시는 인프라가 조금 부족해도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조용하고 쾌적한 경남 혁신도시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전 전과 후의 근무 경험을 비교한다면?

경남 혁신도시에 이렇게 많은 공기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진주에는 국토안전관리원뿐만 아니라 LH, 한국남동발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많은 공공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팀에서 LH와 함께 진행한 국토교통부 기지단 현장취재 행사 업무를 도와드렸습니다. 이렇듯 이전 직장에서는 다른 기관과 크게 교류할 기회가 없었지만, 경남 혁신도시에서는 이전 공공기관끼리 협업하고 교류할 기회가 많아 개인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 혁신도시에서 당신의 미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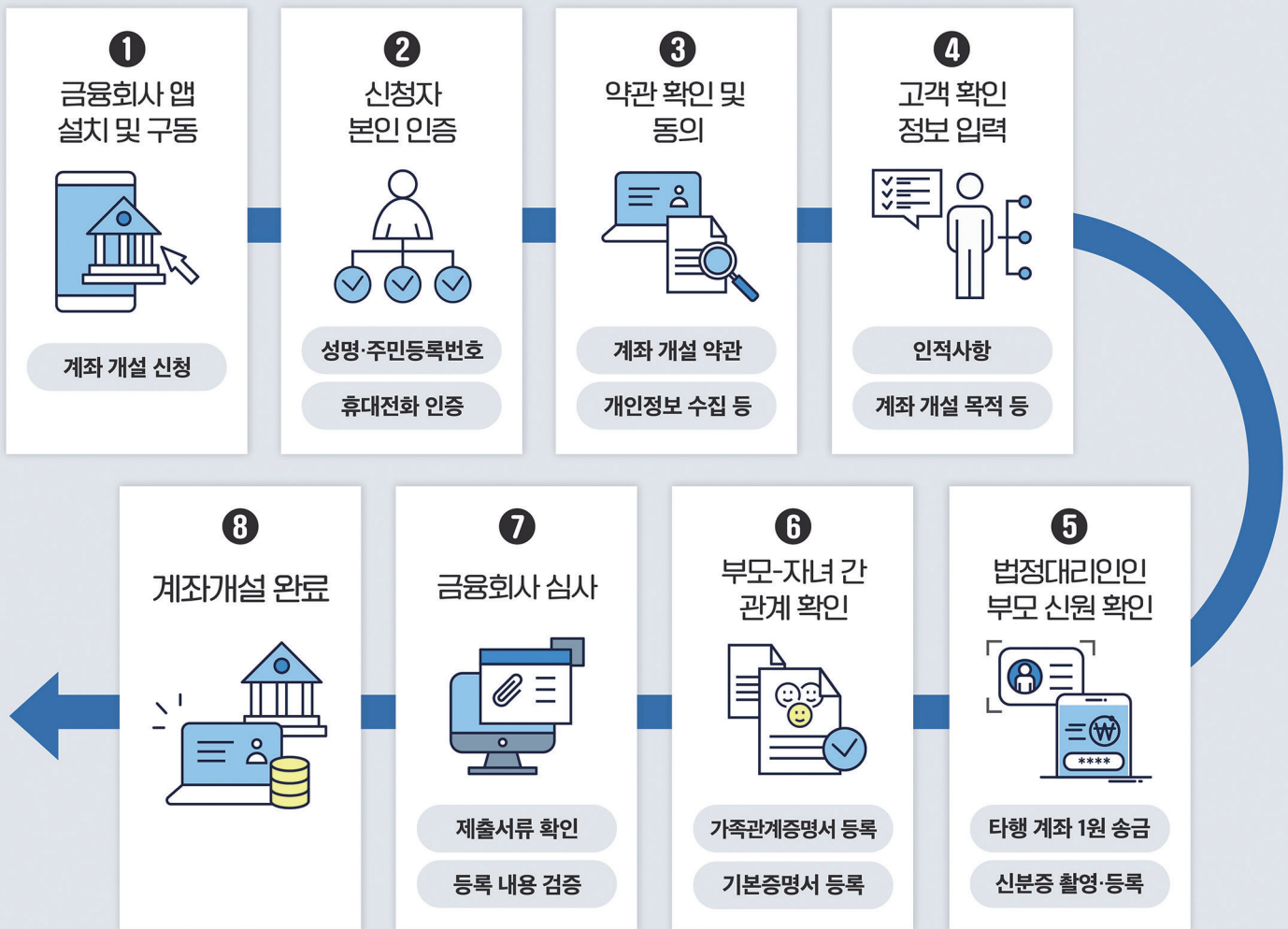
진주는 예로부터 '영남 인재의 절반은 진주에서 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선비와 교육의 고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낳는다면 진주에서 키우고 싶을 만큼 교육과 문화 수준이 높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자녀 양육을 고려하는 분들께 진주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진양호, 진주성, 남강유등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으니 한 번쯤 놀러 오셔서 진주의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자료로 금융회사에 따라 도입 일정, 가입 방식 및 순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 통장 만들기, 이제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예시)



미리 준비해 두세요!

- ✓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휴대전화
- ✓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일반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명의,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채용정보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한국서부발전은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발전 전문 공기업으로서 전기 생산을 위한 발전 및 건설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안발전본부를 비롯해 평택, 서인천, 군산 등 4개 발전단지에서 국내 총발전설비 용량의 약 8.5%에 해당하는 11,441MW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환경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설비 보강과 환경신기술 도입을 통해 2035년까지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2015년 대비 90% 감축해 국내외 최고 수준의 친환경 발전소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한국서부발전 채용의 특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서부발전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직무능력중심 채용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합니다.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크게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으로 나뉘 서류 전형 30배수, 필기 전형 1~2배수, 면접 전형 1배수를 선발합니다. 이후 신체검사와 신원조회에서 입사 적·부 판정을 거쳐 최종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김양욱
한국서부발전
인재육성부 주임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알려주세요.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한국서부발전의 4대 핵심가치와 인재상을 먼저 숙지해 주시고, 본인의 경험에 잘 녹여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에 위반하는 나이, 성별, 학교, 학점, 출신 지역, 가족관계 등을 제외한 산업 분야, 부서, 전공, 직무, 자격사항을 토대로 경험을 작성하면 불필요한 감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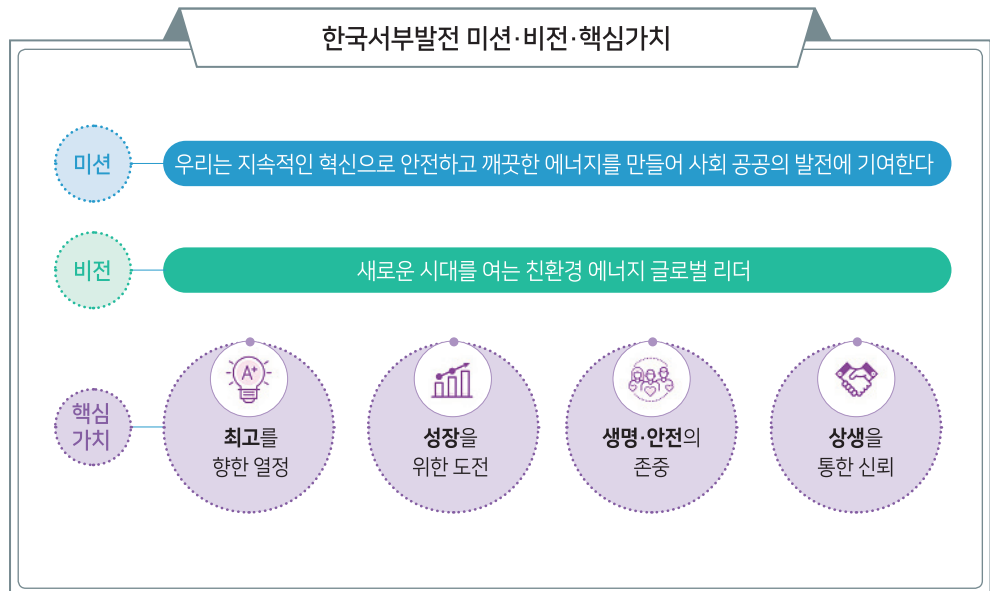
필기·면접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필기시험 중 전공시험은 본인이 선택한 전공 50문제와 한국사 10문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공 공부 이외에 한국사도 틈틈이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NCS는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기와 효율적인 시간 분배가 중요합니다.

면접은 인성면접인 개별 인터뷰와 직무상황면접인 그룹면접으로 이뤄지며, 자기소개서 내용이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준비할 때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읽어 보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담당자로서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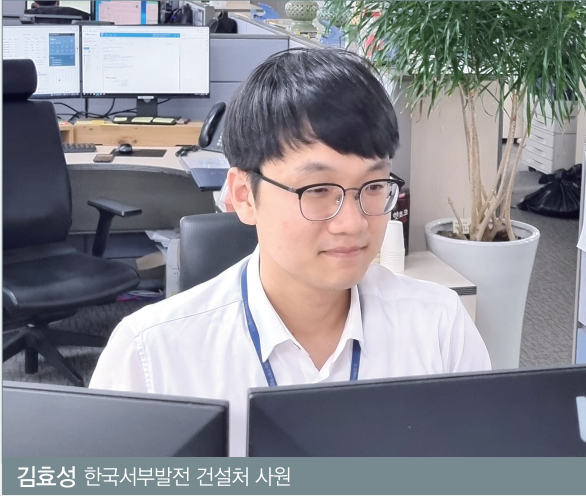
한국서부발전은 회사 특성상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해당하면 전형단계별 가점을 주고, 당사 체험형 인턴 우수 수료자의 경우 필기 전형에서 가점을 주는 등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해 더욱 전략적인 입사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최고 수준의 친환경 발전소를 구현하고픈 많은 분의 입사 지원을 환영합니다.○





현직자
인터뷰

최고의, 혁신의, 준비된



김효성 한국서부발전 건설처 사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서부발전 건설처 사원 김효성입니다. 현재 입사 4년 차이고, 건설처의 유일한 20대입니다.

한국서부발전에서 현재 담당하는 직무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입사 후 3년간 발전소 설비 정비, 공사 설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발전소 건설사업에 필요한 전기·제어설비 발주,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면서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 등의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어 발전소 근무를 꿈꿨고, EBS '극한직업' 석탄화력발전소 24시 편을 시청하며 한국서부발전에서 근무하고 싶었습니다.

학창 시절 도움 됐던 활동이나 경험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학창 시절 농구동호회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농구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생긴 협동심과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저를 차별화된 지원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할 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 업무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발전소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면서 어려운 점입니다. 정비 업무를 할 때는 말은 설비에만 관심을 뒀지만, 건설 업무는 발전소 전체를 알아야 하다 보니 즐거운 만큼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그런 책임감이 저를 성장시킨다는 생각으로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사 1~2년 차 시절 가장 보람 있거나 인상 깊은 경험은 무엇인가요?

석탄화력발전소는 2년에 한 번, 두 달 동안 계획예방정비공사는 큰 공사를 진행합니다. 한 명의 부상자 없이 설계한 대로 공사가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시운전 중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우며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결국 문제를 해결한 일이 가장 보람차고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입사 이후 회사 생활과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입사 전 생각했던 사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입사 이전에 공기업이라고 하면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4년째 회사에 다녀보니 직급 낮은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실수해도 본인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며 이해해 주시는 분위기입니다. 프랑수아즈 사



강의 “진정한 지성인은 타인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처럼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지성인들과 일하는 곳이 한국서부발전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해 보니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한국서부발전이 첫 직장이라 사기업과 비교해 볼 수 없지만, 사기업에서 이직한 동료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유연근무제나 육아휴직 등 개인의 삶과 일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서부 발전을 포함한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꿀팁을 전수해 주세요.
직무와 관련해 본인의 경험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

겠습니다. 사소한 경험이어도 분명히 그 안에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발휘했을 테니까요. 본인이 그동안 어떤 경험을 해왔고, 어떤 역량을 발휘했으며, 그 역량을 직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밭을 갈 때 땅만 보고 가면 어긋나가지만, 앞에 있는 나무를 보며 가면 곧게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도 농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일희일비 하며 마음 흔들리지 말고, 처음에 바라보았던 합격이라는 나무만을 향해 곧게 걸어 최고의, 혁신의, 준비된 인재로서 한국서부발전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채용정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1980년에 설립한 기관입니다. 에너지 공급 단계 이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증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 유도를 목표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채용의 특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입 직원, 무기계약직, 청년인턴(체험형)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 지원부터 모든 채용 과정에 학교, 나이, 성별 등 차별요소를 배제하고, 직무 능력중심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도입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 채용을 기준으로 1단계 서류 전형, 2단계 필기 전형, 3단계 면접 전형 절차로 진행합니다. 서류 전형은 응시자격 적·부 판정과 외국어 성적, 직무기술자격, 사무자동화 자격증을 정량 평가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전형단계별 채용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사회형평 인재 채용을 위해 취업 지원 대상자(보훈), 장애인, 청년, 이전지역 인재(울산·경남),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경력 단절 여성 등에 우대 가점을 부여합니다.



홍혜주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지원실 대리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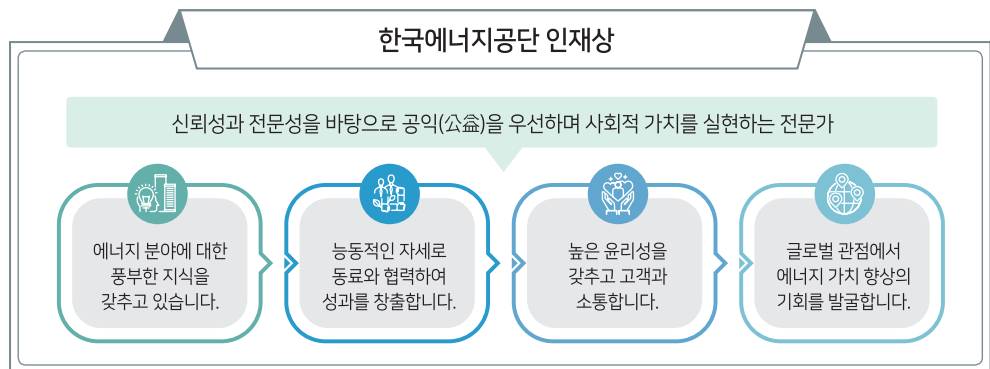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지원 직무를 파악해 작성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지원 직무의 직무기술서와 우리 공단의 인재상, 주 사업 등을 살펴보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 요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경력, 경험, 교육사항 등에서 직무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녹여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단은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의 경우 서류 전형 기준과 별개로 불합격 처리하고 있어, 작성 시 성별, 연령, 출신학교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본적인 블라인드 채용 사항을 준수하고, 동일 내용을 반복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필기 및 면접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필기 전형은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와 직무능력평가(전공시험)를 치르며, 필기 전형일에 인성검사를 함께 진행해 적·부 판정을 반영한 후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 전형은 상황(발표)면접과 경험면접이며, 상황(발표)면접의 경우 주어진 시간 동안 면접 과제를 읽고 발표 준비를 한 후, 면접장에 들어가 발표를 마치면 면접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경험면접은 상황(발표)면접 후 즉시 진행하며, 자기소개서, 경력·경력기술서를 기반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심층 평가합니다. 상황(발표)면접은 우리 공단 사업과 지원자의 지원 직무와 연계한 주제를 출제하니, 공단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해 지원자라면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할지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단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 『KEA 에너지 편람』(국민소통 → 자료실 → 공개자료실), 『KEA 에너지 이슈브리핑』(국민소통 → 공단 소식) 등 각종 공단 사업과 에너지 정책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면접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담당자로서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합격의 고배를 마실 때도 있겠지만, 자신감을 잃지 않고 준비한 것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여러분들과 한국에너지공단의 동료로서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직자
인터뷰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박유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 대리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에 근무 중인 박유규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입사했고,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무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이용하고 싶은 사람 또는 해당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학부 시절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에너지가 기계를 동작시킬 뿐 아니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산업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등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국가 에너지 정책 과제를 수

행하고,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지원했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관심 있는 기업에서 인턴십 경험과 지원 분야 정보 수집 노력이 가장 도움 됐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에서 인턴을 한 경험을 통해 업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턴 동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었던 업계 동향과 산업 환경을 현장에서 경험해 보며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턴 동기들과 취업 준비를 함께하며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의지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해당 분야 기사를 스크랩 하면서 이슈를 파악했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화력발전 등으로 구분해 정보를 모으면서 업계의 최신 동향, 법 규제 등을 파악해 관심 분야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 직무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소개해 주세요.

정책의 이해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사회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사업의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담당 업무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있는 다양한 법령 및 발전사업 절차 등을 알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식 측면의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전사업 절차별로 담당 기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많은 기관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만큼 알아야 할 내용과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하고 전달해야 하며, 사업 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잦아 이를 명확하게 숙지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입사 1~2년 차 시절 가장 보람 있거나 인상 깊은 경험은 무엇인가요?

입사 당시는 지금과 다른, 신재생 교육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과 예비 발전사업자를 위한 태양광 창업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운영하는 교육을 참관하러 다녔는데 어린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수업에 참여하고, 체험기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임을 깨달았을 때 보람 있고 뜻깊었습니다.

입사 이후 회사 생활과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입사 전 생각했던 사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이기에 다소 경직되고 수직적인 문화가 강할 줄 알았지만, 생각과 다르게 팀원 간 소통이 활발하고 훨씬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자율적인 분위기의 동호회 모임으로 친목을 다지기도 하는 등 선후배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또한 자기 계발 환경 제공, 자유로운 휴가 사용 등을 접하면서 공단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을 포함한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꿀팁을 전수해 주세요.

회사 정보를 알고자 할 때 기관에서 발행한 브로슈어 및 여러 책자를 찾아보았습니다. 소개 자료에는 해당 기관의 비전과 핵심가치 등 전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기관의 현재 이슈와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항도 담겨 있어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 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본다면 기관의 프로젝트, 사업 등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입사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방향이 옳은지 불안함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고민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생각에, 그저 계획한 것을 믿고 우직하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불안감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2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직무능력중심 채용 부문의 작품을 전재한 것입니다.

30대도 공공기관 취업이 가능한가요? YES!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용기낼 수 있었던 이유

돌고 돌아 공공기관 입사를 꿈꾸게 된 28살, 남들보다 진로 선택의 과정이 길었을 뿐 결코 늦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NCS 채용에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차별도 받지 않았습니다. 늦깎이 취업준비생이었지만 끝내 공공기관 현직자로 취업준비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단연코 NCS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2014년, 4년제 경제학과를 졸업할 당시의 저는 금융권(사기업) 입사를 희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관련 금융기관에 종사해 보니 저와 맞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며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다시 취업 시장에 발을 내디뎠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매정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왜 그만뒀?”, “다른 곳에 가면 괜찮을 것 같아?”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제게 혼란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NCS 채용이 있었기에 용기 낼 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총 7번의 지원을 거치며 여러 번 탈락의 쓴맛을 보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평한 채용 전형 아래 계속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1년 하반기, 31살의 나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사’라는 목표를 해내고

야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화려한 스펙이 없어도,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공단에 입사하기까지의 준비 과정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NCS 전형, 취업준비의 나침반이 되다

2018년, 사기업 퇴사를 앞두고 공공기관에 서류를 지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보유하고 있던 경력과 스펙은 ‘3년 정도의 사기업 근무 경력과 금융 및 회계 자격증’이 전부였습니다. 공공기관과 관련 없는 경력과 스펙을 가지고 지원하면서 처음부터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류 합격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그 상황이 신기하기도 했고 떨떠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댄 내가 어떻게 서류 합격을 할 수 있었을까?’ 고민해 보니 자기소개서에 녹아든 제 경험들이 인정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수한 대학, 높은 학점 등으로 ‘나’라는 사람이 평가되어 ‘나의 무능력함’을 탓하기도 했었는데, 직무능력중심으로 이뤄지는 평가에서는 여태까지 쌓아 온 크고 작은 제 경험들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이는 저를 자



김서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
보험급여팀 주임

연스레 공공기관으로 이끌었습니다.

7전 7승의 원동력, 정량 + 정성

NCS 채용이라고 해서 스펙을 아예 보지 않고 직무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여러 공공기관에 지원했지만, 반 이상의 기관에서는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 NCS 채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제 경험을 성의껏 '작성'하는 것에만 집중했었지만, 이후에는 각 공공기관에서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을 뽑고자 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공공기관의 채용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요구하는 평가항목들을 분석해 봤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기업을 퇴사하고 짧은 휴식기를 가진 뒤, 토익학원부터 등록하기 시작해 어학 및 자격증 등을 취득했고, 공단을 포함한 세 곳의 공공기관 인턴 경험을 쌓아 가면서 공단 정규직 서류 전형에서 요구하는 정량적인 평가항목을 최대한 갖추고자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정성적인 요소(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를 향상시켰습니다. 공단의 서류 전형에서는 정량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 또한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블로그, 취업 카페나 스터디를 통해 접한 합격 자기소개서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질문에서 요구하는 NCS 영역(의사소통능력 등)에 적합한 경험을, 묻는 말에 중점적으로 답하고, 행동 노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 이러한 부분에 유의하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자 했고, 경력기술서 또한 '직무능력중심'이라는 같은 맥락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단의 직무기술서를 보면 필요한 직무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단순히 지원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해당 업무를 통해 배운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NCS 채용이라는 점을 매번 상기하며, 이에 기반을 둔 서술 방식이 일곱 번 도전에서 한 번도 서류 탈락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큰 이유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수적천석(水滴穿石), 꾸준함이 만들어 낸

'필기 합격'

서류 전형에 통과하면 필기 전형으로 넘어오는데, 사기업 인적성만 공부하다 접한 NCS 기반 필기시험은 생소했고, 어려웠습니다. 두세 권의 기본서를 풀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면 할수록 점수가 오르는 커녕 슬럼프에 빠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단을 비롯해 여러 공공기관의 필기시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도전해 봤고, 만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 아닌데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고자 함에 집중했던 점이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지(효율성)가 중요한 부분임을 알고, '버릴 문제는 빠르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버리자'라는 기준을 세우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출판사의 봉투 모의고사를 하루 1개씩 풀어보면서 약한 문제 유형 등을 파악하며 버릴 문제를 골라내는 안목을 길렀고, 공단 필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실천처럼 연습해 보는 반복 과정을 통해 필기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객관화 = '나'라서 할 수 있는 답변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입니다. 앞서 두 번의 최종 탈락을 겪은 상태로 순간의 실수와 부족함을 되새기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면접 기회를 얻었을 때, 이전과 다른 확실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처럼 기출 질문과 답변을 무작정 준비할 것이 아니라 '자기 객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면접 답변에서 포장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다 보니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일관성을 보여주기가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조직원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일관성을 가지고 일관된 면접 답변을 준비했고, 저라는 사람을 꾸며 내기보다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공단에 입사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라는 질문에 예전이라면 제 경험과 역량을 드러내기 바빴겠지만, 당시 면접에서는 "제도적 설명뿐만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직원이 되고 싶다"

라는 답변으로 공단과의 접점이 있었던 경험과 이를 통해 다짐한 포부를 차분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면접에서야 '나를 다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합격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돌고 돌아 합격의 목걸이를 비로소 걸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축하드립니다. 귀하는 2021년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 직원 채용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최종 합격'이라는 합격 창을 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3년 6개월의 울고 웃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NCS 채용 과정을 더 빨리 깨우쳤더라면 단기간에 입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지만 결국 목표하던 기관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었기에 감사한 마음이 더 큼니다. 제 글이 "30대도 공공기관 취업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늦은 나이에 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원동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속도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주눅 들지 말고 여태 잘해 왔던 대로 꾸준히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합격선에 도달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순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2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직무능력중심 채용 부문의 작품을 전재한 것입니다.

NCS, 방황할 자유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취업, 다시 도전하다

몇 년 전부터 수저론이 대두되며 개천에서 용나는 신화는 종결되었다는 기사들이 들끓었습니다. 같은 사회의 출발선에서 배경의 차이로 인해 가슴 아파했던 청년들의 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한 기사에서 취업 시 어떤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냐는 인터뷰에 의외로 '실패할 기회·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꼽혔던 기억이 납니다. 즉 대학 입학-전공 선택-해외연수-스펙 준비-알맞은 나이 등의 수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취업이 매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은 전공 선택을 고민해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학비를 벌며 학교를 다니다 연수를 가지 못할 수 있으며, 생계를 위한 일을 하다가 일정 나이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직무능력중심 채용으로 변경되면서 청년들이 방황할 수 있는 자유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방향 없는 취업준비도 해 보았고 여러 전공을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으며, 현실을 위한 취업으로 일정 나이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NCS를 기준으로 직무에 맞춰 다시 준비하고 도전해, 제가 꿈꿔 왔던 공

공기관의 원하는 직무로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직무능력중심 채용이 아니었다면 일명 여자 취업 마지노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에서 좌절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방황해야 할 자유를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찾는 취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저의 짧은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경영학과'는 아니었지만 당시 문과 취업 선호 1순위인 경영학도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최대한 비슷하게 분류될 수 있는 학문을 복수로 전공했습니다. 경영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하며 이력서를 한 줄 한 줄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온갖 마스크에서 활용하고 성공담과 실패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그 단어, 이력서 100통, 저 또한 100번의 고배 속 냉담한 거절과 좌절을 겪으며 최종으로 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회사라는 배경이 없어졌을 때 나는 무엇으로 남을까?

직장 생활 초기는 기분 좋은 긴장과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이



김효민
통일연구원
인사팀 행정원



공감하는 비에 섞인 용어들이 익숙해질 때쯤, 어떤 일·업무의 전문가보다는 조직 생활의 달인이 돼 가고 있는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신청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매주 본 시험, 탈락의 결과를 어느 회사에서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제출한 이력서 위에서 일단 회사라는 배경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 배경이 사라진 순간에는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권 사람일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도입을 알게 됐습니다. 2017년에 도입된 제도로 채용 시작의 판(나이, 학벌 등 스펙 → 직무능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무능력으로 취업해서 한 직무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일로 자아를 찾는 과정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일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시작하다

가장 먼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통해 제가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직무를 찾았습니다. 현재도 NCS 홈페이지(ncs.go.kr)에 접속하면 직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어떤 업무 태도가 필요한지 매우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사직'으로 분야를 설정하고 습득해야 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하나씩 찾아가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우선 학부보다 세부 분야를 깊게 학습할 수 있는 석사과정에 입학해 수학했습니다. '인사직'에 필요한 지식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전공이 있는 학교를 택해 지식 습득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배

운 지식을 기술로 남기기 위해 '실무' 기회를 얻는데 노력했습니다. 직장도 병행하며 수학하던 시절에는 직장의 제 업무뿐만 아니라 제가 습득하고자 하는 일을 진행하는 팀의 팀원들, 선배들에게 하나씩 물어가며 잔업을 도와 일의 흐름도를 직간접적으로 익히려 했습니다. 추가로 4년 정도의 직장 경력을 직무 이론에 맞춰 흐름도와 업무 세부 사항을 일련의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전일제로 대학원을 다닐 때도 방학 기간을 놓치지 않고 노무법인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지식과 기술의 공백을 채우고 함께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HR)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노동 관련 이슈를 분석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직무 전문가들과 스터디 모임을 통해 현업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과 현업에서 일을 이루어 가는 데 필요한 자세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고

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 발짝 내디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다시 도전하는 시작점에서 이미 30대로 접어들었으며, 실패했을 때 돌아갈 곳이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최고는 아닐지라도 재직 중인 직장을 두고 꿈을 꾸는 상황이 현실성 없는 선택은 아닐지? 사실은 변하지 않을 스펙 위주의 취업 세계에서 앞을 전망하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생각과 길을 택한 내가 너무 우매한 것은 아닐지? 신입사원 평균 나이를 넘는 내가 이 전선에서 도전하는 것이 맞을지? 많은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습니다. 하지만 직

무능력중심 채용 도입 후 다양한 스펙을 지닌 지원자들의 합격 수기를 읽으며, 틀을 세워 노력하던 것들에 집중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직무능력중심의 채용 트렌드를 만나다

저는 졸업 시점에 다시 채용시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놀란 것은 직무능력중심으로 바뀐 시장의 채용 트렌드였습니다. 사기업까지 포함해 공공기관 채용이 정말 직무중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첫 취업준비 때의 이력서와 달리 직무교육 사항과 세부 내용을 기재하고 실제로 그 직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관련 경험을 상세히 기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서류 전형을 통과한 이후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필기(시험) 과목과 면접 항목들이 사전에 공고되어 있었습니다. 생뚱맞은 것을 준비하다 현장에서 하나도 쓰지 못해 허탈해하던 마음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시험 과목도 제가 지원한 인사직은 '인사직무' 시험으로 나왔으며, 이를 위해 공부해 왔던 지식을 풀어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면접 질문 또한 구조화

되어 직무의 지식과 경험, 이를 위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직무기술서의 내용을 참고해 준비한 대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2년의 과정을 지나 제가 원하던 직무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전, 2~3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여러 해의 시간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이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취업 시장은 쉬운 적이 없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그러나 채용 트렌드의 변화로 타고나거나 바꿀 수 없는 스펙이 아니라 '일과 직무'에 집중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예전과 다르게 많은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그룹에서 단순히 취업이 아닌,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일을 하는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직무능력중심 채용은 방황할 수 있는 자유,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일을 통해 자아를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짧은 수기를 마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 신고센터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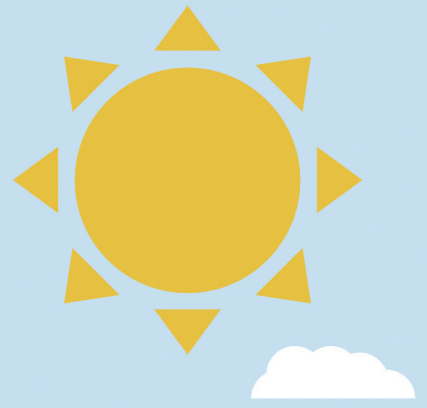
- 전국 49개 지방관서에 설치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고
- 집중 신고 기간 운영(4.19.~6.30.)
- 신고 접수 → 즉시 행정지도 → (필요시) 근로감독 실시

상반기 모성보호 집중감독

-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 의심 사업장 500개소 대상
- 감독 결과 분석해 하반기에 의심 사업장 추가 선정

안전이!
안심이! 가
알려주는

물놀이
안전수칙!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셔요!
(다리→팔→얼굴→가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프플 때, 음주 후는
수영 **NO!**



수영능력 과신 **NO!**
아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YES!**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무모한 구조 **NO!**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119 신고!**



Fire & Safety Expo Korea

국제소방안전박람회

2023. 8. 30. 수 - 9. 1. 금 **EXCO** (대구)



주최 | 소방청 | 대구광역시 | 주관 | EXCO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kotra | 한국소방산업협회 |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 중소벤처기업부 | 공세미디어파트너 | FPN 소방방재신문